

2021

정책연구 2021-27

새만금권 광역도시계획의 필요성과 수립방향 연구

연구진 김재구 · 배진아 · 정학성

Jeonbuk Institute



설립목적

전라북도 및 전북지역 시군의 지역발전과 여성정책 등에
관련된 정책과제에 대하여 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통하여 지역단위의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기여

주요기능

- 도정에 관한 중장기 개발계획 및 주요현안에 대한 조사 연구
- 지역경제, 지역발전, 지역여성에 관한 연구 및 정책 대안의 모색
- 정부, 전라북도 및 국내외의 연구기관과 민간단체의 각종
용역 수탁
- 연구 관련도서 및 간행물 출간
- 국내외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및 정보 교류·협력

연구진 소개

김재구

한양대학교 도시공학 박사

한양대학교 국토도시개발정책연구소 연구원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책임연구원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배진아

전북대학교 건축도시공학과석사

전주시 도시혁신센터 도시재생팀장

전북연구원 전문연구원

정학성

전북연구원 위촉연구원

정책연구 2021-27

새만금권 광역도시계획의 필요성과 수립방향 연구



연구진 및 연구 세부 분담

연구책임	김재구	연구위원	연구총괄, 제1장, 3장 1절, 5장
공동연구	배진아	전문연구원	제2장 1·2절, 4장 2·3·4절,
	정학성	위촉연구원	제2장 3절, 3장 2·3절, 4장 1절

자문위원	임형빈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지남석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최성환	유진 도시건축연구소

연구관리 코드 : 21JU15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서
전북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i -

표목차 | Contents

[표 2-1] 광역도시행정의 체계	11
[표 2-2]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계획의 구분	13
[표 2-3]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될 내용 및 수립기준	15
[표 2-4] 전국 광역도시계획 수립 현황	16
[표 2-5]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및 실행여부	20
[표 2-6]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목표 및 추진전략	23
[표 2-7] 전남 서남권 교통사업 추진 현황 검토	29
[표 2-8] 전남 서남권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및 실행여부	30
[표 2-9] 전주권 광역도시계획 권역 설정을 위한 분석지표	31
[표 2-10] 전주권 광역도시계획 교통분야 추진현황	36
[표 2-11] 전주권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및 실행 여부	37
 [표 3-1] 2015~2019년 수도권·비수도권 및 전라북도 지역내총생산(GRDP) 추이	54
[표 3-2] 2015~2018년 전라북도 시군 별 지역내총생산(GRDP) 추이	55
[표 3-3] 전라북도 주요 산업단지별 생산액 추이	56

그림목차 | Contents

[그림 1-1] 광역도시계획의 위계	3
[그림 1-2] 연구의 체계	5
[그림 2-1] 국토 및 도시계획 체계	12
[그림 2-1] 행정도시 광역도시계획권의 범위	17
[그림 2-2] 2021년 1분기 충청권 인구이동 현황	19
[그림 2-3]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권의 변경 사항	21
[그림 2-4]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권역 설정	22
[그림 2-5]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공간구조	24
[그림 2-6] 국토정책 패러다임과 국토공간 인식 변화	39
[그림 2-7]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국토공간 형성 전략	39
[그림 2-8] 제4차 5+2광역 계획, 제5차 유연한 스마트 국토 계획	41
[그림 3-1] 새만금 기본계획 비전, 개발방향 및 목표	48
[그림 3-2] 새만금 권역별 용지계획도	48
[그림 3-3] 새만금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계획 예시도	49
[그림 3-4] 전라북도 총인구 추이	50
[그림 3-5] 전라북도 15-64세 인구수 및 지방소멸위험지수 추이	51
[그림 3-6] 전라북도 0-14세, 65세 이상 인구 비율 및 노령화지수 추이	52
[그림 3-7] 전라북도 시군별 인구구조 (2021년 6월)	53
[그림 3-8] 전라북도 시군별 65세 이상 인구비율 (2021년 6월 기준)	53
[그림 3-9] 전라북도 2015년~2020년 시군별 연평균 인구증감률	54
[그림 3-10] '15~'18년 전라북도 및 군산·익산·완주 제조업 총생산액 추이 ...	56
[그림 3-11] 2017~2020 전북 주요 산업단지별 생산액 추이	57
[그림 3-12] 새만금권 주변지역 종합여건과 대응방향	61
[그림 4-1]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를 반영한 권역	67
[그림 4-2] 전주권 광역도시계획을 반영한 권역	69
[그림 4-3] 전주권 광역도시계획과 서남권을 반영한 영역	70

[그림 4-4] 새만금 도시공간구조 및 축 구상	73
[그림 4-5] 새만금 도시발전 축 및 광역교통망 계획	73
[그림 4-6] 새만금 녹지축 및 수변 축	74
[그림 4-7] 광역도시기본계획과 새만금 기본계획 축 설정의 중첩	74
[그림 4-8] 새만금권 광역도시계획 도시성장 축 구상	75
[그림 4-9] 새만금권 광역도시계획 신성장산업 축 구상	76
[그림 4-10] 새만금권 광역도시계획 농생명산업 축 구상	77
[그림 4-11] 새만금내 공항노선과 수상교통망 현황	78
[그림 4-12] 새만금권 교통망과 전라북도교통망 현황	79
[그림 4-13] 새만금권 광역도시계획 문화여가 축 구상	80
[그림 4-14] 새만금권 광역도시계획 환경보전 축 구상	81
[그림 4-15] 새만금권 광역도시계획 농업용수공급 및 폐기물시설 계획	82
[그림 4-16] 계획수립 주체에 따른 새만금권 광역도시계획의 범위	85
[그림 5-1] 고창·부안 풍력발전단지 위치도	93
[그림 5-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中 협력관계 관련 주요내용	98
[그림 5-3] 새만금 광역도시기본계획 수립 로드맵	99

1

장

연구의 개요

jeonbuk institute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체계
 3. 기대효과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 광역도시계획은 광역도시권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공간상의 기능을 서로 연계하여 적절한 성장관리의 도모 및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임
 - 광역도시계획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을 대상으로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임
 - 광역도시계획은 20년 내외의 계획 기간을 갖는 장기 계획이자, 도시계획 체계상 최상위 계획임
- 현재 새만금사업은 공공주도 선도사업,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됨에 따라 새만금권의 도시기능과 주변지역의 도시기능과의 연계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
 -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광역도시권 설정 및 발전전략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경쟁력의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함



〈그림 1-1〉 광역도시계획의 위계

- 특히 2021년은 새만금사업은 2단계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기본계획을 재정비함
 - 새만금 기본계획을 기존 청사진 계획에서 실행계획으로 전환함
 - 변경된 새만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새만금 광역도시권 설정 및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수립시기 등에 대한 사전적 검토가 요구됨
- 새만금권 광역도시계획을 통해 새만금사업지역과 함께 연접한 도시간의 기능을 상호 연계하고 광역적인 시설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함
 - 광역도시계획의 주요내용은 공간구조 구상, 기능분담·토지이용·교통 및 물류유통·광역시설·녹지관리 등 부문별 계획,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등을 포함함
 -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를 방지하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광역도시계획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나. 연구 목적

- 본 연구에서는 새만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함께 전라북도 등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공간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한 새만금권 광역도시계획의 필요성과 수립방향 제시가 주목적이라 할 수 있음
 - 대규모 개발사업인 새만금을 중심으로 광역도시권 설정 및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함
 - 새만금권 광역도시계획 수립방향 및 사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연구의 범위 및 체계

가. 연구 범위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19년
 - 목표년도 : 2040년(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

○ 공간적 범위

- 1차 범위 : 새만금 및 주변 시군(군산, 김제, 부안)
- 2차 범위 : 전주 등 기타 전라북도 지역

○ 내용적 범위

- 광역도시계획 수립 사례 분석
- 새만금권과 주변지역 현황 및 발전계획 검토
- 새만금권 광역도시 설정 및 미래상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 제안
- 새만금권 광역도시의 공간구조 및 발전 축 검토

나. 연구 체계



〈그림 1-2〉 연구의 체계

3. 기대효과

- 대규모 개발사업인 새만금과 함께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새만금권의 고른 발전과 함께 연계협력을 위한 기반 마련의 기초적 자료를 제시함
- 국토공간상에서의 새만금의 위상을 제고하고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광역도시권 형성을 통해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지원함

2

장

광역도시계획의 개념 및 사례

jeonbuk institute

-
1. 광역도시계획의 개념과 위상
 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사례
 3. 광역도시계획 관련 정책동향 및 쟁점

제2장 광역도시계획의 개념 및 사례

1. 광역도시계획의 개념과 위상

가. 관련이론 : 도시광역화와 광역도시행정¹⁾

1) 광역도시행정의 필요성

- 한정된 자원의 공동 활용을 통한 편익증진
 - 각 도시의 지리적·사회경제적 특성으로 인하여,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재정만으로는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도시서비스를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움
 - 따라서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한다면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도시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됨
- 사회적 비용의 절감
 - 광역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부정적 외부효과를 내재화하고, 사회적 비용을 관련 사군이 공유·분담하며 다른 지역에 전가하지 않을 수 있게 됨
- 지역 간 격차 완화 및 기회의 균등화
 - 광역권 내 도시들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기반시설 공급수준에 있어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광역권 형성을 통해 광역권 내 지역에 동등·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대응 가능
-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 사군 단위 행정구조는 광역적 도시문제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 서, 지역 간 광역행정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광역적 지역 문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촉진할 수 있음
- 집행 및 관리의 효과성 증대
 - 교통, 상하수도, 환경 등 광역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들을 공간적으로 적절하게 배치 하고 사업입지를 합리적으로 선정하는 등의 복잡한 사안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인 집

1) 2025년 전주권 광역도시계획, 전라북도, PP.11 ~ PP.15

행 및 관리를 할 수 있게 함

2) 광역도시행정의 필요사례

○ 광역시설의 비효율성과 갈등 방지

- 상하수도시설의 과잉 및 중복투자, 광역폐기물처리장 분담금 문제 등에서 비롯되고 있는 사회 문제의 방지 및 해결

○ 난개발에 따른 지역 환경자원의 훼손 방지

- 각종개발사업과 불법 형질 변경, 그린벨트 해제 후 난개발 문제에서 대두되는 사회 문제의 방지 및 해결

○ 생활권·경제권 확대에 따른 교통 환경 개선

- 통과교통과 내부교통의 혼재에 대한 생활 불편,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에 따른 과제 해결하기 위한 방안 제시

○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광역적 대응

- 혁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역협력, 토지이용 및 주변지역 관리

3) 광역도시행정의 체계

○ 하나 이상의 지방자치 단체 간에 겹치는 문제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는 지방자치 법상 사무의 위탁, 행정협의회, 지방자체단체조합 3가지가 있음

① 사무의 위탁

-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방식으로 협력으로서의 의미보다는 위탁의 의미가 강함²⁾

② 행정협의회

-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거나, 사무에 대한 연락 및 조정을 도모하고, 광역적인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간

2) 2025년 전주권 광역도시계획, 전라북도, PP.11 ~ PP.15

의 협의에 의하여 규약을 정하는 것으로 이는 단순한 협의기구이기 때문에 협의된 사항에 관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다소 약함³⁾

③ 지방자치단체조합

- 자치단체의 사무를 공동 처리하기 위하여 두 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합의에 의하여 규약을 정하여 설치하는 법인격을 가진 공공단체⁴⁾
- 이는 조합의 설립에 참여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에 독자성 및 자유로운 의사발언 및 평등성을 보장해 주고 있으며, 이러한 조합구성에 의한 협력방식은 프랑스와 일본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⁵⁾

〈표 2-1〉 광역도시행정의 체계

구분	사무의 위탁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동기	시설·서비스에 대한 공동대응	관련 사무에 대한 협의	회원자치단체 간 합의
성격	협약(공법상의 계약)	법인격 없음(협의기구)	법인격 보유
사무범위	특정서비스	제한 없음	특정서비스
재원조달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자료 : 2025년 전주권 광역도시계획

나. 광역도시계획의 위상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세워지는 최상위 도시계획

- 우리나라의 국토 및 도시계획 체계는 「국토기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삼고 있으며 행정구역의 범위에 따라 수립주체 및 내용을 달리함
- 「국토기본법」에 따라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 계획’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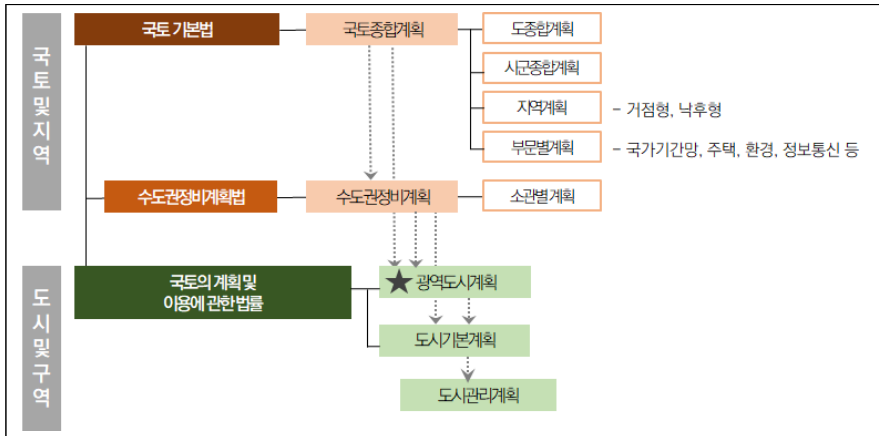
3) 2025년 전주권 광역도시계획. 전라북도. PP.11 ~ PP.15

4) 「지방자치법」, 8장 3절

5) 2025년 전주권 광역도시계획. 전라북도. PP.11 ~ PP.15

수립하며 개별 법률에 따라 지역계획, 부문별 계획을 세분화하여 수립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에 따라 세부 사업계획이 수립됨⁶⁾
- 광역도시계획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수립되는 ‘국토종합계획’과 시군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도시기본·관리계획의 중간 영역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계획임



〈그림 2-1〉 국토 및 도시계획 체계

2) 시군 도시기본계획의 지침이 되는 장기 종합발전 계획

- 광역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립되어지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시군기본계획, 시군관리계획의 지침이 됨
- 인접한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행정구역에 대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거나 시·군 기능을 상호 연계함으로써 적절한 성장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계획⁷⁾
- 시·군의 장기 발전 계획을 세우고 이에 지역·지구·구역의 결정, 도시개발사업

6) 토지이용 용어사전, 411-460

7)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1344, 2020.12

및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과 달리 시
군별 기능분담, 환경보전, 광역시설 공급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계획됨

〈표 2-2〉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계획의 구분

구분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정의	도시계획체계상 최상위 계획	장기적으로 시·군이 발 전하여야 할 구조적 틀 제시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발 전방향을 구체화하고 실 현시키는 중기계획
입안 권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 지사, 장·군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사·시장 또는 군수	
수립 주기	20년 단위	20년 단위	10년 단위
대상 권역	부산권, 전주권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자료 : 도시계획정보서비스(www.upis.go.kr)

3) 광역도시계획의 특징

- 광역도시계획은 전략계획, 정책계획, 지침계획 3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개
발행위나 토지이용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은 담지 않음
 - 전략계획 : 광역권의 주요 정책과제를 발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를 설
정,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 전략을 제시⁸⁾
 - 정책계획 :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각 정책주체가 추진할 실천계획과 시책을 체계
적으로 제시⁹⁾
 - 지침계획 : 도시계획·도시관리계획 등의 하위 계획 수립과 개별 개발 사업 인허가
시 고려할 상위적 사항들이 제시됨

8) 행복도시광역도시계획(2009). P.5

9) 행복도시광역도시계획(2009). P.5

다. 광역도시계획의 주요 내용¹⁰⁾

1)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목적

- 인접한 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 유도
 - 인접한 시·군 간에 정주공간 및 통근권 등의 외연적 확산이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토지이용, 환경보전 등의 측면에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이들 지역을 하나의 계획권으로 지정하여 광역도시계획권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
- 대도시권의 경쟁력 강화
 - 특별시·광역시를 중심으로 설정된 광역도시계획권의 경우 도시간 기능분담, 광역적인 토지이용, 광역시설의 배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등을 통해 도시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
- 기초 도시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공간단위로의 재편성
 - 최소한의 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곤란한 지역들을 하나의 광역도시계획권으로 묶어 기초적인 도시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새로운 공간단위를 설정

2) 계획수립의 기본원칙

- 광역도시계획권의 미래상과 전략 제시 및 관련계획과의 적합성 도모
 - 광역도시계획권의 미래상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전략을 제시하고, 국토종합계획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관련 계획과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수립
- 광역도시계획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현안과 미래상 제시
 - 도시 간 기능분담, 광역적인 토지이용 및 환경보전, 광역시설의 배치 등 광역도시계획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특정 현안사항이나 미래상 달성에 필요한 항목만을 대상으로 수립 할 수 있음¹¹⁾
- 하위계획에 명확한 지침 전달
 -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하위계획에 유연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위계획에 명확

10)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1344, 2020.12

11)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1344, 2020.12

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음¹²⁾

○ 자연환경, 역사문화환경, 자연재해·재난·감염병에 종합계획 수립

- 양호한 자연환경의 보전·관리, 역사문화환경의 보존·활용, 자연재해·재난·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 확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¹³⁾

3)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될 내용 및 수립 기준

○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에서는 다음의 6가지를 제시하고 있음

〈표 2-3〉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될 내용 및 수립기준

구분	지침 내용	
① 광역도시계획권의 현황 및 이슈	· 인구·주택, 인문·자연환경,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특성분석 · 대내외 여건추이 전망, 관련계획 분석, 잠재·제약요인 분석	
② 광역도시계획권의 미래상 및 발전 방향	·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미래상과 발전방향 설정 · 장단기 목표와 전략 수립, 주요지표 설정 및 모니터링계획 수립	
③ 공간구조 구상 및 기능분담계획	· 인구와 사회·경제·환경지표를 감안한 공간구조 개편 · 계획의 장단기 목표와 관련한 발전 축, 교통 축, 녹지 축의 설정 · 자족생활이 가능한 생활권의 재편성, 도시 기능분담 수립	
④ 부문별 계획	토지이용	· 시가화용지, 시가화예정용지, 보전용지 설정
	교통 및 물류	· 도로·철도·공항 및 항만에 대한 계획관리
	녹지관리	· 녹지 축과 녹지거점에 따른 녹지체계, 시설구상
	환경보전	· 수질 및 대기질 개선과 자연환경보전 계획
	광역시설	· 기존시설의 고도이용방안 강구, 기피시설협의
	경관	· 경관 특성분석, 중점관리 및 랜드마크 계획
	문화·여가공간	· 관광벨트계획, 관광네트워크, 시설 배치
	방재 및 안전	· 재해취약 대응, 연안침식 대응, 안전사고 대응
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추가지정,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원칙 · 해제가능총량의 추정 및 재배분, 국무회의 심의 의무	
⑥ 집행 및 관리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분담, 하위계획 조차사항 제시	

자료 :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국토해양부 훈령 제1344호(2020). 국토교통부

12)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1344, 2020.12

13)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1344, 2020.12

4)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과정

- 광역도시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의 입안 →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청취 → 광역도시계획 승인 및 확정 과정을 거침
- 주민대표, 전문가가 참석한 공청회 개최, 지방의회 및 지자체 의견 청취가 의무화되어 있음

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사례

가. 광역도시계획 수립 현황

-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광역도시계획은 14개 권역에 수립되어 있음

〈표 2-4〉 전국 광역도시계획 수립 현황

단위 : km², 만명

권역	면적	목표연도	인구	해당도시
수도권	6,852	2020	1,831	서울, 인천, 수원 등(29시 4군)
부산권	1,700	2020	520	부산, 양산, 김해(3시)
대구권	4,978	2020	311	대구, 경산, 영천, 칠곡, 고령, 성주, 군위, 청도(3시 5군)
광주권	3,259	2020	220	광주, 나주, 장성, 담양, 화순, 함평(2시 4군)
대전권	4,638	2020	199	대전, 공주, 논산, 연기, 금산, 옥천, 청원, 청주(4시 4군)
행복도시	3,597	2030	370	대전, 연기, 공주, 계룡, 청주, 청원, 진천(5시 4군)
창원권	1,613	2020	220	마산, 창원, 진해, 함안(3시 1군)
광양만권	5,279	2025	115	여수, 순천, 광양(3개시)
전주권	2,457	2025	183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4시 1군)
청주권	3,403	2020	143	청주, 청원, 보은, 진천, 괴산, 음성, 증평(1시 6군)
전남서남권	3,711	2025	90	목포, 해남, 영암, 무안, 완도, 진도, 신안(1시 6군)
제주권	1,847	2020	80	제주, 서귀포, 남제주, 북제주(2시 2군)
공주역세권	2,584	2030	50	공주, 논산, 계룡, 부여, 청양(3시 2군)
내포산도사원	3,496	2030	114	서산, 당진, 보령, 홍성, 예산, 태안(3시 3군)

자료 : 국토해양부 도시업무편람(2018년)

나.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1) 광역도시계획의 구역

-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은 2005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2005년)」을 근거로 수립된 계획으로 5시 4군, 총 3,597km²을 대상으로 함



〈그림 2-2〉 행정도시 광역도시계획권의 범위

- 광역도시계획권과 행복도시 주변지역 2개의 계획구역으로 나뉘어 계획됨
 - 광역도시계획권 : 5시 4개군
 - 행복도시 주변지역 : 3개 시·군, 9개면
 - 이는 행복도시 행정구역 보다는 크고 광역도시계획권보다는 작으면서 행복도시 조성으로 인한 영향력이 1차로 전달되는 중간범위를 설정하여 급격한 빨대효과를 방지하기 위함

2) 광역도시계획의 목표인구와 현 인구

- 광역도시계획에서 설정한 2030년 행복도시 목표인구는 311만명이며 현재의 인구는 295만 3,907명으로 거의 목표치에 도달함
 - 행복도시(세종시)의 인구는 2012년 11.3만명에서 2020년 현재 35.6만명으로 가파

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대전광역시의 인구는 2012년 152만명에서 2020년 146만으로 줄어들어 대전광역시 인구가 대거 세종시로 이전한 것에 대한 지표가 됨

3) 토지이용

- 행복도시의 토지이용은 국가 균형발전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접목되었으며 구역을 총 6개의 권역으로 구분함
 - 중앙행정권역, 문화국제교류권역, 도시행정권역, 대학연구권역, 의료복지권역/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권역, 첨단산업기능권역으로 구분됨
- 5-1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권역이 부산과 함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2021년까지 1조 4,876억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현재 사업 막바지에 접어들어 현 정부의 시책을 평가하는 주요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됨¹⁴⁾

4) 광역교통

- 행복도시 광역교통의 계획의 주요 목표는 개발 축과 연계한 교통축의 형성과 기 교통망과 광역교통망의 연계성 형성이 있음
- 수도권과의 높은 접근성, 기존 거점도시와의 소통을 위해 BRT(간선급행버스체계), DRT(수요응답형교통체계),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다양한 교통시스템이 운영 중임
 - 2021년에는 KTX오송역과 세종을 연결하는 BRT의 과부하로 인해 대용량 전기굴절 버스를 추가 공급하고 DRT 교통을 신설하는 등, 복합 교통시스템이 구축된 도시를 구현시켜 나가고 있음¹⁵⁾
 - 교통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를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전담하고 있으며 CNG 충전소, 터미널운영, 운수·광고사업 등을 통합 운영하여 도시교통의 서비스 질을 제고 시키고 있음

14) 스마트시티(www.smartcity.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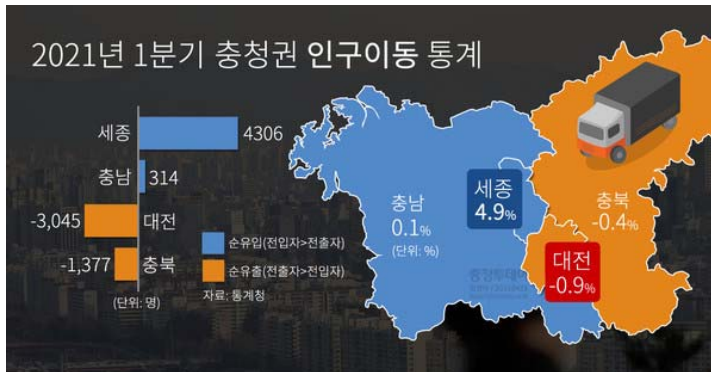
15) 세종도시교통공사(<https://www.sctc.kr/>)

5) 녹지·경관·환경·문화여가·방재 관리

- 녹지·경관·환경·문화여가는 보존해야 할 가치와 활용해야 할 가치를 구분하고 광역시설로서의 기초 수요를 재 측정함
- 도시기본계획, 경관기본계획,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재난안전기본계획 등 부문별 계획의 기조로 스며들어 활용됨

6) 행복도시개발에 따른 행복도시권 영향

- 행복도시 광역도시권의 경우 주변 중소도시뿐만 아니라 대전, 청주 등 대도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출되는 등 주변지역의 역류효과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2012년~2021년 5월 간 대전에서 세종으로의 인구 순유출은 10만 명을 상회함
 - 세종으로의 전입인구 중 대전, 충남 전출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¹⁶⁾
 - 세종으로의 전입사유는 직업, 주택, 가족 순으로 나타남¹⁷⁾



〈그림 2-3〉 2021년 1분기 충청권 인구이동 현황 (자료: 충청투데이)

- 대도시가 중소도시를 흡수하는 전통적 의미의 역류효과가 아닌, 세종시와 같이 질적으로 젊은 도시가 상대적으로 노후한 인접 대도시의 청년층 인구를 흡수하는 새로운 유형의 빨대효과가 발생함

16) 대전세종연구원, 2018

17) 대전세종연구원, 2018

- 세종시의 시·도간 전입인구 연령대 중 30대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¹⁸⁾
- 세종시가 출범한 2012년 대비 2015년 충청남도 GRD는 약 10조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¹⁹⁾

7) 종합

- 국가가 주도한 대규모 프로젝트로 파급력과 영향력이 국가 전체에 이르는 계획을 담고 있어 국가 미래도시 조성에 대한 국가기조와 최신 신기술을 알 수 있음
- 광역도시계획에서 수립한 국가 스마트 시범도시, 광역교통망이 대부분 실현되었으며 녹지·경관·환경·문화여가 등도 부문 기본계획의 기조로 이어짐
- 특히 교통부문에서 수도권과 세종시를 잇는 다양한 교통체계가 신설되었고 지방 공기업에 관리되어 지는 현 유지관리 체계는 새만금권 광역도시계획 교통 분야에 참고가 될 만한 시사점을 주고 있음

〈표 2-5〉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및 실행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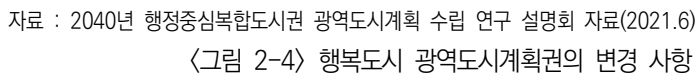
구분	계획	실행	내용
인구	2030년 311만	○	-2021년 7월기 준 296만 -세종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반면 대전광역시는 크게 감소
토지이용	6개 구역 토지이용 5-1 스마트시티 권역	○	-부산과 함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선정되어 2021년 완공
교통망	전국에서 접근이 수월한 최첨단 교통망체계	○	-BRT, DRT, 시내버스, 마을버스, 전가굴절버스 등 다양한 교통망체계 형성
부문계획	녹지, 경관, 환경, 문화여가, 방재	○	-각 도시·군기본계획의 기조, 경관기본계획 등 부분기본계획으로 발전

- 행정중심도시와 광역권 사이에 행정도시 주변권역이라는 완충구역을 설정하여 급격한 빨대 효과를 방지하고자 한 구역구상은 새만금권 광역도시계획에서도 참고할만한 사항
- 행복도시건설청과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는 광역도시계획을

18) 대전세종연구원, 2018

19)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282750>

- 현재 수립중인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권역은 세종시를 중심으로 1시간(70km) 이내 반경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존 광역도시권 영역이 확장되었음
- 이는 단순히 인접성만을 고려하여 광역도시권을 설정하기 보다는 실제 공간적 활동범위를 전제로 중심지 및 주변지역의 설정하여 광역도시로의 공간구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



다. 부산권 광역도시계획(변경)

1) 수립 배경

-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는 지난 2010년 2월에 “202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변경)”을 수립함
 - 부산권에는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의 김해시, 양산시가 포함됨
 -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관한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이 개정(2008. 11. 3) 됨에 따라 2005년 12월 최초로 수립된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을 일부 변경함
 -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부산의 “두바이형 Port-Business-Valley” 조성과 김해시, 양산시의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함



자료 : 부산권 광역도시계획(변경), 2010

〈그림 2-5〉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권역 설정

〈표 2-6〉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목표 및 추진전략²⁰⁾

목 표	광역도시계획추진전략
○문화·여가·교통· 광역도시시설 정비를 통한 삶의 질 향상	- 부산시를 중심으로 한 분산집중형 공간구조형성을 위한 중심도시 개발 - 난개발 방지를 위한 합리적 수요예측과 계획적 공급
○친환경적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성 함양	- 광역생태녹지축 구축과 녹지 및 여가공간에 대한 접근성 제고 - 효율적, 친환경적인 광역교통체계 구축
○도시권의 경쟁력 제고	- 부산권의 입지여건을 살린 해양 및 첨단정보산업 기능 도입 - 부산권의 거점별 입지성격에 따른 산업기능배분 - 광역차원의 대기질, 수질, 생태계 보전체계 구축

자료 : 부산권 광역도시계획(변경),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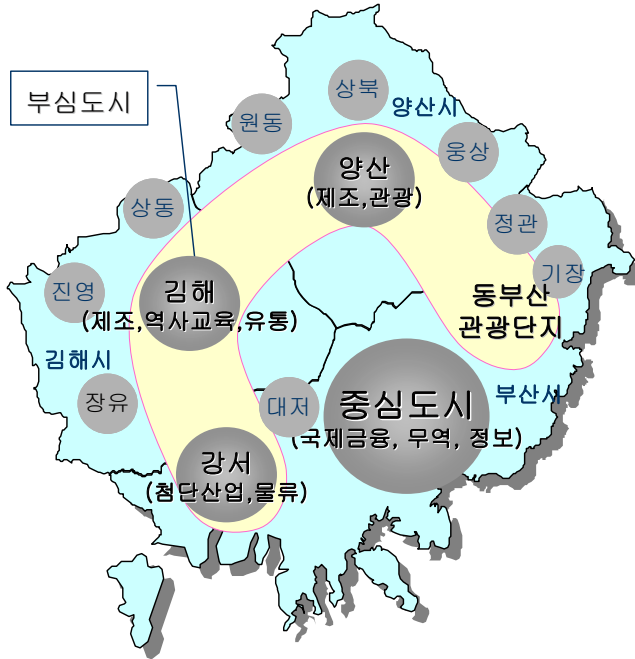
2) 공간구조 및 광역도시계획

- 부산권은 국토공간에서 환동해 경제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 부산권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동시에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과 생활의 질 향상을 목표로 삼고 있음
- 계획인구는 520만 인으로 설정(부산시 410만인, 양산시 50만인, 김해시 60만인)²¹⁾
- 공간구조 설정을 위해 과밀 인구의 효율적 외곽분산을 위한 쾌적한 주거단지 개발, 생산기반육성에 의한 직주근접 강화, 도시간 유기적 연계를 위한 광역교통망 체계구성, 생태녹지축의 보전, 도시특성별 산업기능 배분을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음²²⁾

20) 부산권 광역도시계획(변경), 2010

21) 부산권 광역도시계획(변경), 2010

22) 부산권 광역도시계획(변경), 2010



자료 : 부산권 광역도시계획(변경), 2010

〈그림 2-6〉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공간구조

- 광역 여가·녹지계획에서는 공간구조상에서 설정된 광역산악 녹지축, 광역하천 녹지축, 해안 녹지축을 중심으로 세부 녹지축을 구성하고 단절지점을 연결시킴
- 광역교통계획은 크게 공간구조 개편과 연계된 교통계획의 수립, 대량수송 거점간 철도망 확충, 항만시설 확충 및 부두별 기능 재배치, 국제공항 노선망의 확충 및 공항시설의 확충, 광역도시권간 교통망 구축을 계획함²³⁾
- 광역공급 및 이용시설계획으로는 양산 IFT의 효과적인 활용 및 부산신항 복합물류단지의 조성을 통한 화물유통체계의 합리화 도모, 부산광역시의 부산종합화물터미널의 경우 신항복합물류단지로 이전 검토, 김해공항과 관련된 공항물류기능으로서 강서지역에 서부산 유통단지 조성, 유라시아 대륙과 환태평양을 연결하는 국제복합물류시설(신항만, 공항, 대륙철도) 거점화를 포함²⁴⁾

23) 부산권 광역도시계획(변경), 2010

24) 부산권 광역도시계획(변경), 2010

라. 전남서남권 광역도시계획

1) 광역도시계획 구역

■ 1시, 6군 총 3,711km²

- 서해안과 남해안에 접해 있는 목포시,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은 총 3,711km²에 이름
- 2007년 9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구역이 최종 지정고시 되었으며 계획의 기준연도는 2005년, 목표연도는 2025년임

2) 광역도시계획의 목표인구와 현 인구

① 2025년 목표인구 : 90만명

- 2005년 기준으로 자연적 인구 증가를 약 49만 명, 사회적 인구증가를 41만 명으로 추산하여 2025년 목표인구를 90만 명으로 설정함
- 목포시가 2005년 24만 명에서 2025년 32만 명으로 증가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계획됨

② 2021년 현재인구 : 55만명

- 2021년(7월 기준) 55만 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행정구역별 인구는 목포 22만, 해남 7만 명, 영암 5만 명, 무안 9만 명, 완도 5만 명, 진도 3만 명, 신안 4만 명임
- 전남서남권의 현재 인구가 목표인구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는 2025년 32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던 목포시 인구가 되레 22만 명으로 감소한데 있음
 - 목포시의 인구가 줄어든데는 나주 혁신도시 건설을 비롯한 대규모 신규택지 개발을 원인으로 들 수 있을 것

3) 공간기능

① 시군별 도시기능의 키워드 추출

- 광역도시계획에서 행정구역별로 도시기능에 대한 주요 키워드를 추출하여 제시하고 있는 특징이 있음

- 도청소재지 : 행정·업무·국제교류 기능
- 목포 : 문화해양 및 국제항만물류기능 - 해남 : 레저, 첨단친환경농업
- 영암 : 레저, 조선 산업 - 무안 : 국제항공물류, 첨단산업
- 완도 : 해양바이오, 수산양식 - 진도 : 남도문화예술, 조선, 풍력
- 신안 : 해양관광, 천일염·염생바이오, 태양광

② 도시·군기본계획에서 광역도시계획의 기능을 그대로 수용

- 목포시,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광역도시계획에서 사용한 도시 기능을 그대로 수용함
- 목포시의 도시기본계획의 비전은 '환서해권 경제벨트의 허브 해양문화관광도시'로 해양 및 관광산업을 주요한 전략으로 삼고 있어 광역도시계획에서의 제시한 도시의 기능과 맥을 같이 함
- 무안군 역시 광역도시계획에서 제시된 국제항공물류기능과 첨단산업을 그대로 수용하여 군 미래상을 '서남권 거점의 중추행정도시, 신선장 산업의 항공물류도시'로 선정함²⁵⁾

4) 토지이용

① 해양자원, 조선산업을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 제시

-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와 해양관광벨트화 및 클러스터 조성을 주요한 사업으로 제시함
- 내륙 무안을 중심으로 한 물류단지, 친환경농수산 산업 클러스터와 남도문화 체

25) 목포시 도시기본계획(2030), 무안군기본계획(2030)

힘이 가능한 관광벨트화를 주요한 사업으로 제시하고 있음

② 조선산업,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실현

○ 조선산업 클러스터 구축

- 2004년 전라남도와 국가가 협업하여 신안·고흥지역에 생산유발 9,220억 원, 1만 1,372명 고용을 추정하는 조선산업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함²⁶⁾
- 1,874만㎡에 총 4조 9천억을 투자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민간분야 대형조선사가 1조 9천억, 민간중형 조선사가 3천억을 별도로 투자함²⁷⁾
- 현재 분양이 모두 완료되어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중추지역으로 자리 잡음

○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 빛 가람 에너지 밸리

-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친환경 에너지 발전·소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전라남도과 협업하여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으로 태양광, 해상풍력, 조류를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주요한 목표임²⁸⁾
- SK E&S는 2019년 1조를 투자하여 태양광시설을 신안과 완도에, 풍력시설을 신안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인프라가 집적한 상태임²⁹⁾

5) 문화관광

① 해양관광벨트화, 마리나 시설 집중

-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해양관광벨트화, 마리나 시설, 다도해권 집중 개발이 주요 내용으로 계획되어 있음
- 문화관광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시군별 발전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음
 - 목포 : 근대역사문화 - 해남 : 미래형 농·어촌 체험관광
 - 영암 : 관광, 웰빙 레저 - 무안 : 국제교역 및 산업 비즈니스

26) 한국해운신문(<http://www.maritime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226>)

27) 남도일보. 2007. 12(<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093>)

28) 한전KDN(www.kdn.com)

29) sk에너지 www.skens.com

- 완도 : 청정 생태자원
- 신안 : 다도해상 도서 관광

② ‘갯럭시 아일랜드 은하수 섬’ 프로젝트 관광벨트 조성

- 2005년 전라남도는 전남서남권의 해양관광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 ‘갯럭시 아일랜드 은하수 섬 프로젝트’를 발표함
 - 신안영광지구(다이아몬드제도클러스터), 진도해남지구(조도클러스터), 완도지구(보길도클러스터) 3개의 권역으로 구분
 - 신비로운 자연생태계 체험, 사도낭도 인도교 가설과 더불어 다이아몬드 제도에는 마리나 시설을 개발하는 것이 주된 목표
 - 민간자본 약 8천억이 투입되는 사업비와 연안개발을 규제하고 있는 관련법규 44개, 환경파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
 - 총 1초 2천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이를 실행시키는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가교와 도로망이 개설을 완료³⁰⁾

③ 목포 마리나 클러스터 조성사업

- 2012년 목포와 전라남도가 협업하여 1,000척이 정박할 수 있는 마리나 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 1단계 사업은 삼학도에 70억을 투자하여 50피트급 32척이 정박할 수 있는 시설 구축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2021년 현재 시설공사가 완료됨³¹⁾
 - 2020년 해수부가 수립한 제 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권역거점으로 목포가 선정되면서 마리나 클러스터 조성에 탄력을 받은 상태이며 2022년까지 780억이 추가로 투입되어 시설이 정비 될 예정³²⁾

30) 해사신문 2006.02(<http://www.haes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10>)

31) 전남뉴스 2007.07(<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8508>)

32) 해사신문 2020.06(<http://www.haes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1326>)

6) 광역교통

① 휴양, 물류기능에 집중, 도서지역의 교통권 확보

- 대단위 개발사업, 토지 이용계획 등을 반영한 교통체계 구축하고 국제 교류도시, 휴양 레저도시, 산업 직접도시를 반영한 교통계획을 수립함
- 항공, 철도, 도로의 복합교통체계 구축하고 작은 섬들이 많은 지역 특성상 도서 지역의 교통기본권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음

② 광역도시계획에 제시되어 있는 11개 사업 실행 완료

- 도로, 철도, 항만으로 사업 구역과 사업비가 추정되어 있으며 이중 대규모 클러스터, 무안국 제공항, 섬 관광을 가능하게 하는 도로는 대부분 개통되었음

〈표 2-7〉 전남 서남권 교통사업 추진 현황 검토

구분	노선 및 사업명	추진	비고
국도	압해·암태간 연도교건설	○	2019.4 개통
	무안·영광(국도77호선)	○	2019.12개통
	진도해안일주도로	○	2021년 2차 착공 ³³⁾
	다이아몬드제도연결 (국도2호선 개설, 장산 ~ 안좌 지방도 805호선)	○	천사대교 2019.4 개통
	약산 ~ 거금 (국도 27호선)	○	2021.05 국비확보 ³⁴⁾
국지도	무안공항 ~ 순천권연결(국지도 60호선)		
지방도	영산강변도로 건설	○	2020.3 개통
공항	무안국제공항활주로 연장	○	2021년 착공 ³⁵⁾
항만	송공연안항		
	크루즈 전용부두(목포 신항 및 고하도 인근해역)	○	2021년 착공 ³⁶⁾
기타	스포츠 전지훈련장	○	목포 2009년 개장

33) 머니투데이 20.06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61111008212081>)

34) 신아일보 21.05 (<https://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0942>)

35) 서울신문 20.09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918500195>)

36) 대한뉴스 21.03 (<http://www.daehannews.kr/mobile/article.html?no=488353>)

7) 광역시설

○ 광역화장시설 1개 조성 완료

- 광역도시계획에서 제시된 광역화장시설(남도광역추모공원)이 2019년 3월 개장함
- 총사업비 195억이 투입되어 해남군에 설치되었으며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3개 군이 협력하여 추진함³⁷⁾

8) 종합

〈표 2-8〉 전남 서남권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및 실행여부

구분	계획	실행	내용
인구	90만명	△	· 현재 인구 55만 명 -목포시의 급격한 인구 감소로 계획 인구와의 괴리 발생
공간 기능	지역별 행정업무 국제교류, 문화, 레저, 바이오 등 핵심키워드 추출	○	· 도시·군계획에서 광역도시기능 그대로 수용 -특히 목포, 무안군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맥을 같이 함
토지 이용	해양, 조선산업의 활용 해양관광벨트화	○	· 조선산업과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완료 · 해양관광벨트 및 마리나 거점 육성 · 국가 핵심사업과 결합하여 인프라 완료
교통	도서지역의 교통권 확보	○	· 광역도시계획에 제시된 사업 중 11개 사업이 완료됨
광역 시설	화장, 소각, 방재 차원에서의 광역시설	○	· 1개 광역화장시설 조성 완료 · 해남, 완도, 진도군 참여

- 서해안과 남해안에 접해 있는 중소·소규모 도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천혜의 해안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방법이 시군단위별로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음
- 계획 인구 90만명 대비 현재 인구 55만 명으로 계획과 현실 사이에 큰 차이가 있으나 조선·신재생 에너지의 클러스터, 해양관광벨트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조선 클러스터 사업은 국가와 전라남도도가 협업하여 추진한 대표적인 클러스터

37) 연합뉴스 19.03 (<https://www.yna.co.kr/view/AKR20190324021200054>)

사례로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

- 특히 광역도시계획에서 제시된 교통 분야 사업 11개, 광역화장시설 1개가 완공된 점은 새만금권 광역도시계획 후 사업 실행 시점에서 참고할만한 사항임
- 관광지로써 가치가 높으나 흩어져 있는 섬 자원을 연결하기 위한 도로건설 및 연결로 공사가 주로 추진됨

마. 전주권 광역도시계획

1) 광역도시계획 구역

- 대상 : 4시 1군, 총 2,457km²
 - 전주시와 더불어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와 완주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은 총 2,457km²
- 정량적 분석지표 산출을 통한 광역도시계획 구역의 설정
 - 타 광역도시계획과는 달리 분석지표를 설정하여 광역도시계획 권역 설정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함
 - 분석지표는 중심도시와의 연계성, 주변지역의 도시적 특성, 지역의 특수성 3가지를 평가함

〈표 2-9〉 전주권 광역도시계획 권역 설정을 위한 분석지표

구분	분석지표	산출근거
(1) 중심도시와의 연계성	중심도시로의 통근비율	(단위지역으로부터 중심도시로의 통근·통학 수 / 단위지역의 통근·통학 수) × 100
	중심도시로의 통근자 비율과 중심도시로부터의 통근자 비율의 합	{(단위지역으로부터 중심도시로의 통근·통학자수 / 단위지역의 통근·통학 수) × 100} + {(중심도시로부터 단위지역로의 통근·통학자수) × 100}
(2) 주변지역의 도시적 특성	전업농가비율	(전업농가수/단위지역 총가수) × 100
	인구밀도	단위지역의 인구수/전체행정구역면적
	도시적 토지이용비율	도시적용 시/전체행정구역면적
(3) 지역의 특수성	광역시설이용권	광역시설(광역 공급처리시설 등)의 공동이용
	자치단체간 협치	기초행정협의회 구성과 협치

2) 광역도시계획의 목표인구와 현 인구

■ 2025년 목표인구 : 183만 명

- 2005년 기준으로 자연적 인구 증가를 약 145만 명, 사회적 인구증가를 38만 명으로 추산하여 2025년 목표인구를 183만 명으로 설정함
- 전주시가 82만 명으로 전체의 44.9%, 군산시가 40만 명으로 전체의 22.1%, 익산시가 38만 명으로 전체의 20.8%를 차지하도록 배분함

■ 2021년 현재 인구 : 179만 명

- 전주광역권의 인구는 2021년(7월) 현재 179만 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행정구역별로는 전주시 66만(36.9%), 익산시 28만(15.6%), 군산시 26만(14.5%), 완주군 9만(5.0%) 김제시 8만4.5%) 순으로 거주함
 - 전주시의 인구 비중을 82만 명, 44.9%로 설정한 계획안과 달리, 현재에는 66만, 36.9%로 나타나 전주시의 인구 집중이 소폭 하락함
- 전주와 완주를 제외한 지역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군산시와 익산시, 김제시 인구 감소률이 급격히 진행됨
 - 전주시의 인구는 2011년 64.5만에서 2021년 65.7만으로, 완주군의 인구는 2011년 8.4만에서 9.1만으로 증가세를 보임
 - 이는 전주시와 완주군에 걸쳐있는 전북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에코시티 등 대규모 택지개발의 영향으로 판단됨
 - 군산시는 2012년 27.9만에서 2020년 26.8명까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GM 및 현대중공업의 철수에 따른 지역 중심산업의 경기회복이 더디기 때문으로 추측됨
- 2021년을 기준으로 전라북도 인구 180만명 선이 무너져 인구 하락이 지속됨

3) 공간기능

■ 개발 · 교통 · 녹지 축

-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고 지역 간 상호연계성을 강화하는 환상·대상형 구조를 적

용하여 십자형 개발 축을 구상하고 있음

- 4×3+2R로 남북방향 4개의 축, 동서방향 3개의 축 2개의 순환 축을 형성하는 구조를 계획함
- 수경·산악·해안 축 + 녹지벨트로 금강, 만경강, 동진강이 중심이 되는 수경, 대둔산·운장산·만덕산·모악산이 중심이 되는 산악녹지축을 구상함
- 교통분야에서 이를 실행시키기 위한 단위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며 새만금, 혁신도시의 접근성 향상과 관련된 도로는 준공이 완료됨

4) 토지이용

■ 지역 내 상호보완적인 기능분담체계의 구축

- 도시의 위치적·사회적·기능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이 가지고 가야 할 중추기능과 핵심키워드를 제시하고 있음
 - 전주시 : 지식기반산업, 첨단정보산업의 기반, 혁신도시 변화의 주도
 - 군산시 : 교역전진기지, 해양관광자원 기반마련, 새만금 배후 생산 지원도시
 - 익산시 : 교통의 결절지로 물류 및 유통 기능, 보석·석재가공
 - 김제시 : 대규모 영농기반 생산거점, 친환경적 생태도시, 새만금과 연계한 도농복합형의 전원도시
 - 완주군 : 배후전원도시 및 휴양공간 형성, 첨단산업 생산기능 보유

■ 농식품 및 농기계 관련 클러스터의 실현

- 익산 식품산업 클러스터
 -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으로 농어업 발전 견인을 위해 식품산업의 인프라 강화를 목적으로 두고 있음
 - 기능성 평가지원센터, 품질안전센터, 패키징센터, 한국식품안전클러스터진흥원 등 6개 기업지원 시설과 식품기업·연구소 160개 유치를 목적으로 함
 - 사업 규모는 232만㎡, 사업비는 총 5,535억이며 입주 100% 달성 시 매출은 15조 원, 22천 명의 일자리가 신규 창출될 것으로 예상함³⁸⁾

○ 전라북도 농기계 클러스터 구축

- 현 정부 공약중 하나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조성 중 농기계 분야 사업이 김제를 중심으로 추진 중에 있음
- 정보통신기술과 위치정보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농업환경 안전망 조성, 농작업기계 성능개선, 완전 자율주행 농기계 개발 등이 실현되었음³⁹⁾
- 1단계 사업은 기 확보된 수출농기계 품질고도화 기반 구축과 농작업기계 성능 고도화 지원, 농업환경 안전관리 실증관리모델 3개 사업으로 나뉘며 현재 막바지에 접어들⁴⁰⁾

○ 전라북도 친환경 전기 차 클러스터 구축

- 군산 강소특구를 중심으로 친환경 전기 차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 2021년 6월 처음으로 국비 투입이 시작됨
- 2015년 신기술 창출·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전국 5개 지역에 연구개발특구를 지정, 지난 2020년에는 군산이 강소특구로 추가 지정되었으며 특화분야로는 ‘친환경 전기 차 부품 소재’가 설정됨⁴¹⁾
- 군산 강소특구 육성사업은 기술발굴 연계, 기술창업 육성, 강소특구 특화성장 지원 사업으로 구성돼 향후 5년간 490억 원 규모 예산이 투입될 예정⁴²⁾

5) 문화관광

■ 4개 권역의 구분

○ 역사문화·전원휴양관광권 : 전주, 완주

- 역사문화관광 기능 및 요식업 배후 도시기능을 수행하고 백제문화권과 조선 문화권 중심의 역사문화관광 기능을 수행하도록 계획되어 있음
- 핵심자원으로는 전통문화특구, 송광사, 대둔산, 전주한옥마을, 대야 자연휴양림이 있음

○ 수변관광·해양레저관광권 : 군산

38) 국가식품클러스터(www.foodpolis.kr)

39) 한국농기계신문(<https://www.kam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95>)

40) 매일일보(<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718782>)

41) 프레시안(<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20312344525567#0DKU>)

42) 전민일보(<https://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4103>)

- 국제교역 업무에 기반 한 도시형 산업·위락·휴양기능을 담당하며 주요 자원으로는 군장 레저타운, 금강주변 관광지, 고군산군도 해상공원이 있음

○ 백제문화·보석테마권 : 익산

-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체험 관광권역으로 백제문화권종합개발사업, 왕궁보석 테마파크를 활용한 위락관광 기능을 형성하도록 계획되어 있음

○ 생태관광·농업문화관광권

- 국제교역 업무에 기반한 농생명·휴양관광 권역으로 동진강 유역 생태공원과 그린랜드, 모악산 도립공원이 주요한 자산임

6) 광역교통

■ 통합광역교통, 지역 간선기능 강화, 신교통수단 도입에 주력

- 새만금과 혁신도시를 반영한 외부 간선도로망과 순환도로 신설과 국제물류센터와 농축수산물 유통 인프라 형성을 위한 철도·항만·해운·항공체계 개편을 제안함

■ 광역권 외곽순환도로, 새만금연결 도로, 군산공항 확충 완공

- 국도 1호선과 21선이 연계되는 서남권 우회도로는 완공되었으며 현재 에코시티, 삼례, 봉동이 연결되는 서남권 우회도로가 건설 중
- 새만금과 혁신도시를 잇는 도로 및 철도망 계획은 도 핵심사업으로 지정되어 국비확보를 추진하고 있음
- 군산공항 확충사업은 2017년 약 50억을 투입하여 추진되었으며 노선은 2020년 이스타항공의 제주노선이 증편되었음⁴³⁾

43) 매일건설신문(http://www.mcnews.co.kr/sub_read.html?uid=55553)

〈표 2-10〉 전주권 광역도시계획 교통분야 추진현황

구분	노선 및 사업명	추진	비고
도로	전주~완주~익산~군산~김제 외부순환도로	○	사남면 우회도로 건설 중
	전주광역시권내 내부순환형도로	x	
	새만금~익산왕궁면 고속도로 연장	x	
	새만금~김제~혁신도시~전주~무주 고속도로 연장	△	도 핵심과제 선정
철도	군산~익산~전주~혁신도시 광역도시철도	△	도 핵심과제 선정
공항	군산공항 확충	○	시설보수 ¹⁷ , 노선정면 ²⁰ (44)
물류	군장산업단지 내 종합물류단지 ⁽⁴⁵⁾	△	'20 철도개통으로 물류 거점 인프라 구축

7) 광역시설

■ 광역소각시설 1개 조성 완료

- 광역도시계획에서 제시되어 있는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장이 2006년 9월 조성되어 가동을 시작함
- 1일 4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이 참여하였으며 내구 연한이 2026년으로 종료되어 2차 광역시설 보급이 불가피한 상황임⁽⁴⁶⁾

8) 종합

- 전북 대표 도시인 전주시의 영향력 파악을 위해 분석지표를 활용한 점은, 정량분석을 활용하여 새만금권 광역권역 설정에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 2021년 기준 인구 규모 180만명 선이 붕괴된 시점에서 전주 및 완주군을 제외한 인구절벽이 광역화에 미치는 영향력 검토가 필요함

44) 매일건설신문 17.02 (<http://www.mcnews.co.kr/55553>)

45) 국토부 정책브리프 20.12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26183>)

46) 전북도민일보 20.11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9395>)

- 전주권 우회도로 건설 외 새만금의 교통성 확장, 새만금과 혁신도시의 연결을 위한 도로·철도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은 광역도시계획 수립 후 뒤따라야 할 사후 대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시사점을 주고 있음

〈표 2-11〉 전주권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및 실행 여부

구분	계획	실행	내용
인구	183만명	△	· 현재 인구 108만명 -전주, 완주의 인구는 증가세인 반면, 익산과 군산, 김제의 인구는 줄고 있음
토지 이용	자식기반, 교통 결절지, 항만산업, 농업기반 지역으로서의 도시가능	○	· 익산식품산업클러스터 추진 · 전라북도 농기계 클러스터 구축 추진 ·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조성 추진 · 전라북도 친환경 전기차 클러스터 추진 · 군산강소특구를 중심으로 한 미래산업 추진
교통	광역도시권 연계강화 새만금, 혁신도시 연결	○	· 서남권우회도로 건설 중 · 그 외 교통인프라 사업 추진 미진
광역 시설	화장, 소각, 방재 차원에서의 광역시설	○	· 1개 광역소각시설 조성 완료 · 전주, 김제, 완주군 참여

3. 광역도시계획 관련 정책동향 및 쟁점

가. 관리형 광역도시계획과 연계협력형 광역도시계획 구분

- 최근 광역도시계획이 2040년을 목표연도로 새롭게 수립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최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은 대상 구역이 확장되어 지역계획으로의 기능이 좀 더 확장되고 있는 추세임
- 인접한 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간상의 기능을 서로 연계하여 적절한 성장관리 도모 및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관리형 공간계획이 주를 이룸
- 최근 광역도시계획은 대도시권으로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관련 광역시도 및 시군 간의 연계협력을 보다 강조하는 형태의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지고 있음
- 이는 기존 광역도시계획의 실효성과 영향력 등이 애매모호하게 형성된 한계에서 벗어나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되고 있으며 시군 단위의 기초 광역계획 뿐만 아니라 시도단위의 초광역 계획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음을 시사함

나. 성장관리를 위한 광역화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광역화로

- 기존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중심기능을 갖춘 거점도시의 무분별한 공간적 확산을 억제하고, 인접한 시·군 지역과의 공간적·기능적 연계를 통한 동반성장 도모를 목적으로 수립·시행되어옴
- 그러나 국가적으로 성장잠재력이 둔화하고 있고, 양적 경제발전보다 실질적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임
-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도 국토정책 패러다임이 국토의 경제적 가치보다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선회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그림 2-7〉 국토정책 패러다임과 국토공간 인식 변화
(자료: 제5차 국토종합계획)

- 또한, 균형발전정책의 체감성과가 여전히 미흡한 상황에서 인구감소와 저성장에 대한 국토정책적 대응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혁신적, 자율적, 협력적 지역발전을 국토공간 형성 추진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음
 - 특히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기반시설의 재조정을 통해 도시공간의 재구조화를 유도하고, 이 과정에서 행정구역을 초월한 다양한 형태의 지역 간 연대·협력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



〈그림 2-8〉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국토공간 형성 전략 (자료: 제5차 국토종합계획)

- 결론적으로, 기존 광역권 형성 목적은 성장관리를 위한 공간구조 조정·기능분산에 있었던 반면, 오늘날에는 인구감소·저성장 등 국가 전반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위기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광역권 정책이 요구됨
- 다양한 분야·주체 간의 연대협력을 통해 국토의 회복력·유연성을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복잡한 여건변화와 돌발적인 위기에 대응 가능한 ‘지속가능한 국토’의 형성이 국토정책의 최종 지향점으로 제시되고 있음

다. 영토적 광역권에서 네트워크형 광역권으로

- 기존 국토정책에서 광역권·광역도시권은 명확한 경계를 갖춘 영토적 권역으로 표상되어 옴
- 이로 인해 기존 광역권은 권역 내부의 동질성에 기반한 배타적 성격과 광역권 내부 자원만을 활용하는 내생적 발전을 지향하는 경향을 보임
- 이러한 영토적 광역권 개념은 내부의 결속에는 유리하나, 인접 광역권과 과도한 경쟁 관계를 형성하여 광역권 간 유연한 연계·협력을 어렵게 함
- 또한, 광역권 외부 자원의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게 되어 국가적 여건변화나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력과 회복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명확한 경계를 지닌 영토적 광역권 대신, 네트워크형 연계·협력을 통한 ‘개방적 광역권’ 형성을 지향하고 있음
- 따라서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광역도시권 설정에 있어, 부문별·지역별 특성 및 수요에 따라 광역권 외부와 유연한 연계·협력이 가능한 개방적 네트워크형 광역도시계획권 설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자료 : 제4차, 제5차 국토종합계획

〈그림 2-9〉 제4차 5+2광역 계획, 제5차 유연한 스마트 국토 계획

3

장

새만금권 주요 현황

jeonbuk institute

-
1. 새만금 주요 현황 및 추진계획
 2. 새만금권 주변지역 주요 현황
 3. 종합여건 및 시사점

제3장 새만금권 주요 현황

1. 새만금 주요 현황 및 추진계획

가.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새만금 기본계획, 2021)

1) 그린뉴딜·신산업 중심지로 새만금 역할 재정립

- 4차 산업혁명의 진전,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등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K-뉴딜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개발비전과 목표 제시⁴⁷⁾
- 스마트 그린산단, 그린수소 복합단지, 미래 모빌리티 실증단지 등 새만금의 여건에 부합하는 선도사업 제시

2) 실행계획으로의 전환

- 2050년을 목표로 실현 가능한 단계적 용지개발 로드맵 마련⁴⁸⁾
- 향후 10년간(2단계)의 개발계획 및 사업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⁴⁹⁾

3) 공공의 역할 강화 및 민간투자 여건 개선

- 개별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 해소를 위해 내부 간선도로(지역 간 연결도로), 상수관로 등 필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 사업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공공과 민간의 용지조성 역할 분담
- 투자진흥지구 지정, 국가시범사업 추진 등 특화 인센티브 확대

47) 새만금 기본계획(변경), 2021

48) 새만금 기본계획(변경), 2021

49) 새만금 기본계획(변경), 2021

나. 새만금사업 추진 연혁

- 1971~1986 : 새만금 사업 예정지조사 등 실시
- 1989. 11 : 새만금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발표
- 1991. 10 : 공유수면 매립면허고시
- 1991. 11 : 사업시행인가고시
- 1991. 11 : 방조제 사업 착공
- 1999.5~2000.6 : 민간공동조사위원회 구성 및 조사 실시
- 2000. 08 : 공동조사보고서 국무총리실 제출
- 2001. 05 : 총리 주재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정부방침 결정
- 2001. 08 : 정부방침에 대한 후속 세부실천계획 수립
- 2001. 08 : 매립면허 취소소송(환경·시민단체)
- 2006. 03 : 대법원 판결(정부 측 승소)
- 2006. 04 : 방조제 최종 물막이 공사 완료
- 2007. 04 :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발표(농지 72%, 산업·관광 등 비농지 28%)
- 2007. 12 :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2008.12.28 특별법 발효)
- 2008. 02 : 인수위에서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계획 발표
- 2008. 04 : 새만금 일부지역 경제자유구역 지정(산업·관광지구 28.6㎢)
- 2008. 10 :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변경(안) 보고(국무회의)
- 2008. 12 :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발족(대통령훈령 제234호)
- 2009. 01 : 새만금위원회 발족
- 2009. 04 : 「새만금사업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의결
- 2009. 07 :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조정(안) 발표
- 2010. 01 :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 심의확정(제4차새만금위원회)
- 2010. 04 : 새만금 방조제 준공
- 2010. 08 : 세계 최장(33.9km) 방조제로 기네스북 등재

- 2010. 11 :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 추진상황 보고(제5차새만금위원회)
- 2011. 03 :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 확정
- 2012. 06 : 새만금신항만 기공식
- 2012. 11 : 새만금특별법 개정
- 2013. 09 : 새만금개발청 개청
- 2014. 09 :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 2015. 07 : 새만금동서도로 착공
- 2015. 10 :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
- 2017. 07 : 새만금남북도로 착공
- 2017. 08 :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개최지 선정
- 2018. 09 :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 2019. 01 : 새만금국제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선정
- 2019. 05 : 공공주도 선도사업(스마트수변도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 2020. 11 : 새만금동서도로 준공

다. 새만금사업의 비전과 개발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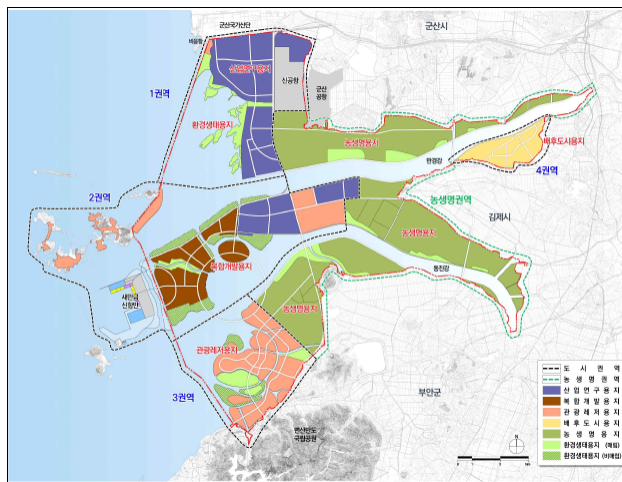
- 새만금이 지닌 입지적 강점과 산업인프라, 새만금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 등을 반영 구체적 미래상을 탄소중립사회를 선도하는 「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新산업 중심지」로 설정함
- 지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경쟁역량과 지속가능성 및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이 중요함을 강조함



〈그림 3-1〉 새만금 기본계획 비전, 개발방향 및 목표

라. 공간구조계획 및 발전 축 설정

- 방대한 사업면적을 고려하여 새만금 지역을 5대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 내에서 일-삶-여가가 완성되는, 자족성을 고려한 개발·관리 추진⁵⁰⁾



〈그림 3-2〉 새만금 권역별 용지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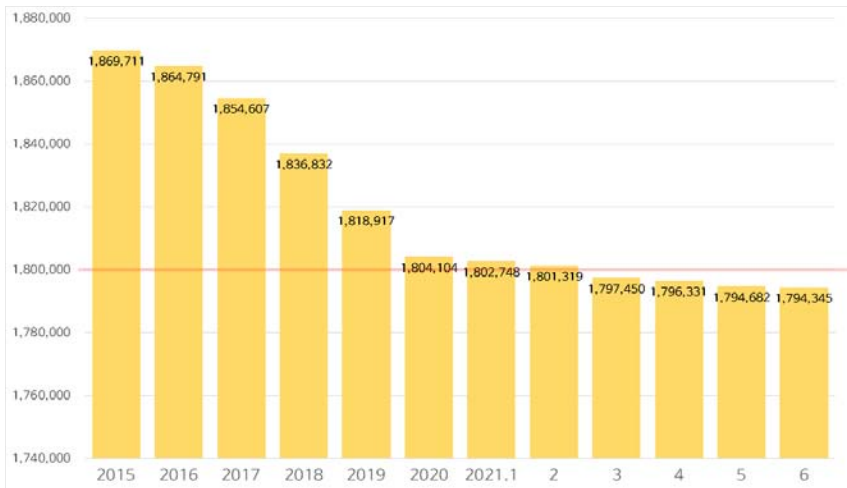
50) 새만금 기본계획(변경), 2021

권역 53,600인, 1권역에 50,800인, 배후도시 40,000인, 농생명권역에 16,400인 배분함

2. 새만금권 주변지역 주요 현황

가. 인구감소·노령화 심화

- 전라북도의 총인구수는 2015년 약 187.0만 명에서 2021년 6월에는 179.4만 명으로 약 7.6만 명 감소하였음
- 2021년 3월에는 180만 명 선이 붕괴됨
- 2000년 200만 명 이하로 감소한 이래 지난 20년간 매년 1만여 명씩 감소하는 추세



〈그림 3-4〉 전라북도 총인구 추이

- 경제활동인구인 15~64세 인구는 2015년 128.3만 명에서 2021년 6월에는 119.6만 명으로 감소하였음
- 전라북도의 지방소멸위험지수⁵³⁾는 2015년 0.641을 보였으나, 2020년에는 소멸 위

53) 20~39세 여성 인구/65세 이상 인구, 0.5 미만이면 소멸 위험지역, 0.2 미만일 경우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구분

험지역 기준인 0.5 미만으로 감소했으며 2021년 6월 기준 0.475를 보이고 있음

- 전라북도는 15~64세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세가 총인구의 감소세보다 높게 나타나는 인구 유출형 감소유형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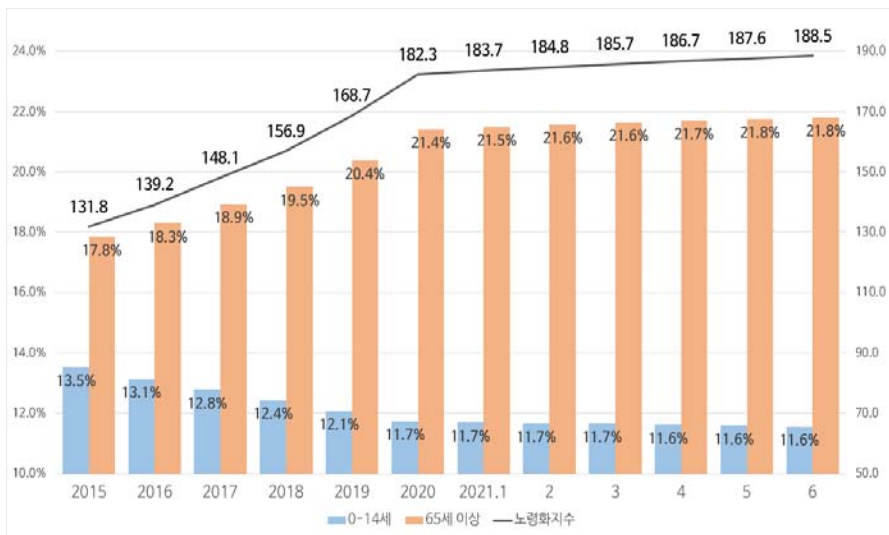


〈그림 3-5〉 전라북도 15~64세 인구수 및 지방소멸위험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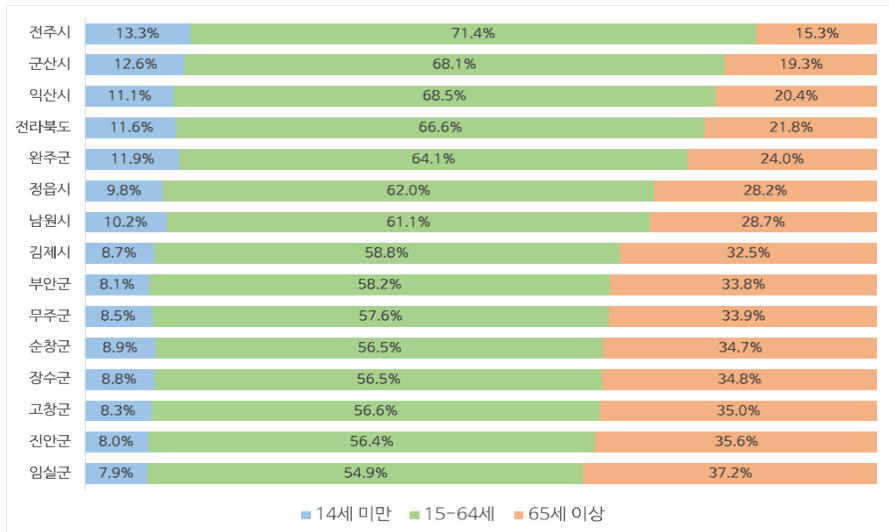
- 전라북도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2015년 17.8%에서 2021년 6월에는 21.8%로 증가하여 초고령 인구구조로 진입함
 - 전라북도의 노령화지수⁵⁴⁾는 2015년 131.8에서 2021년 6월에는 188.5로 증가함
 - 같은 기간 14세 미만 인구비율은 13.5%에서 11.6%로 감소함
-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전주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의 인구가 감소함
 - 고창, 부안, 순창, 임실 등은 연평균 1.5% 이상의 인구감소율을 보임
- 전라북도의 합계출산율은 2000년 1.60명에서 2019년 0.97명으로 감소함
 - 출생 건수는 2000년 25,173건에서 2019년 8,971건으로 크게 감소한 반면, 사망자 수는 2000년 14,502건에서 2019년 14,525건으로 큰 변동 없이 유지됨

54) 14세 미만 유소년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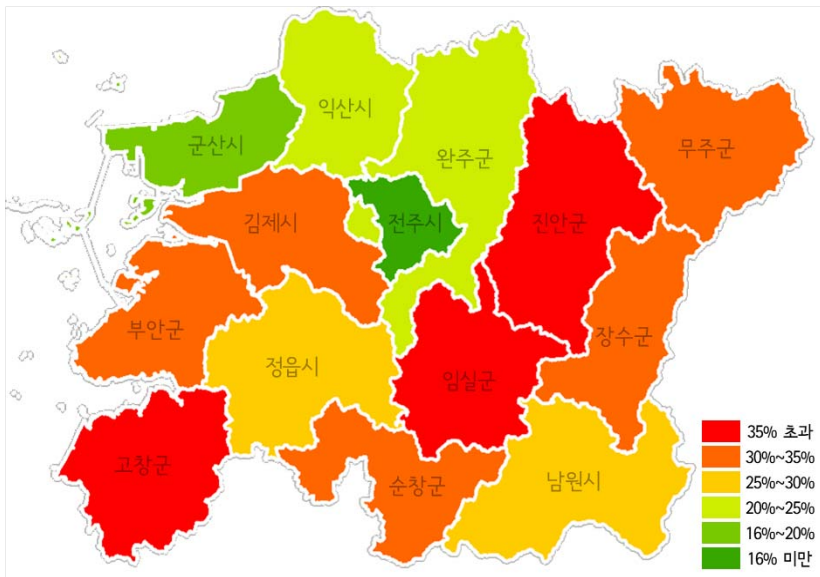
- 인구의 자연증감은 2000년 10,671명 증가에서 2019년 5,554명 감소로 대폭 하락함
- 전주시와 군산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의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이 20%를 상회하여 초고령사회로 진입함
- 특히 완주군을 제외한 모든 군 단위 지자체의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이 30%를 상회하고 14세 이하 유소년인구의 비율은 10%를 하회함
- 2015년 이후 전주시를 제외한 모든 도내 지자체의 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음
- 부안, 고창, 임실, 순창 등 남부권 지역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5% 이상 인구가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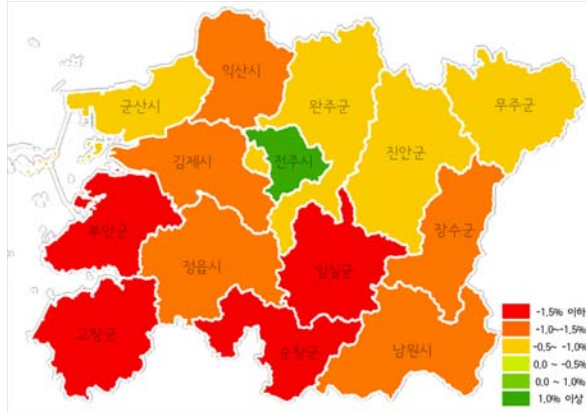
〈그림 3-6〉 전라북도 0-14세, 65세 이상 인구 비율 및 노령화지수 추이



〈그림 3-7〉 전라북도 시군별 인구구조 (2021년 6월)



〈그림 3-8〉 전라북도 시군별 65세 이상 인구비율 (2021년 6월 기준)



〈그림 3-9〉 전라북도 2015년~2020년 시군별 연평균 인구증감률

나. 산업침체 지속

- 전라북도의 GRDP는 2015년~2018년 연평균 2.5% 증가했으나, 전국 GRDP 대비 전북 GRDP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여 2017년 이후로는 2.7%를 하회함
- 2015년~2018년 전주, 익산, 김제, 진안, 임실, 고창, 부안 등 7개 시군의 GRDP 성장률은 전라북도 평균 성장률을 상회하였으나 정읍, 남원, 완주, 장수, 순창 5개 시군은 전라북도 평균보다 낮은 성장률을 보였으며, 동기간 군산, 무주는 GRDP가 감소함

〈표 3-1〉 2015~2019년 수도권·비수도권 및 전라북도 지역내총생산(GRDP) 추이

단위 : 백억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국		166,084	174,357	184,035	190,253	192,742
수도권	총생산	83,228	87,947	94,405	99,230	100,338
	비중	50.1%	50.4%	51.3%	52.2%	52.1%
비수도권	총생산	82,856	86,411	89,630	91,023	92,404
	비중	49.9%	49.6%	48.7%	47.8%	47.9%
전라북도	총생산	4,702	4,788	4,935	5,060	5,200
	비중	2.83%	2.75%	2.68%	2.66%	2.70%

출처 : 통계청(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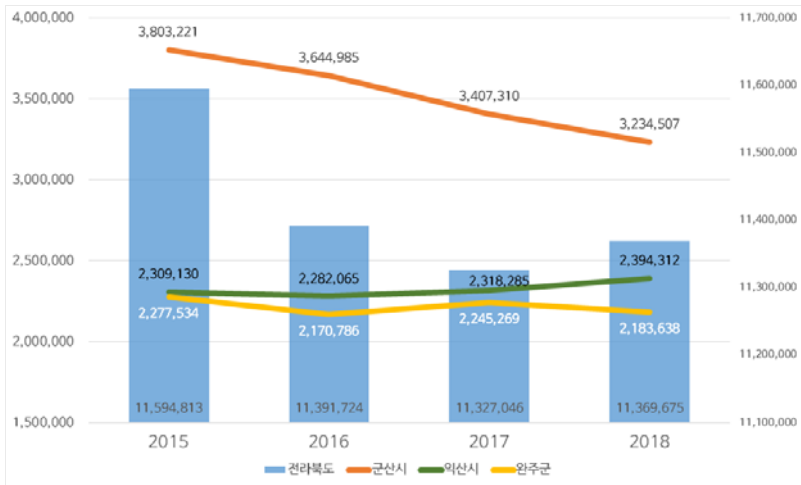
〈표 3-2〉 2015~2018년 전라북도 시군 별 지역내총생산(GRDP)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연증감
전라북도	47,018,028	47,879,046	49,348,477	50,595,318	2.5%
전주시	13,251,346	13,886,080	14,587,612	15,300,987	4.9%
군산시	9,554,687	9,399,640	9,150,677	9,098,915	-1.6%
익산시	6,990,072	7,039,090	7,413,669	7,618,352	2.9%
정읍시	2,740,334	2,787,689	2,881,171	2,867,266	1.5%
남원시	1,592,415	1,606,591	1,594,437	1,644,180	1.1%
김제시	2,546,005	2,650,473	2,792,260	2,804,379	3.3%
완주군	4,620,807	4,641,344	4,757,818	4,792,392	1.2%
진안군	550,980	556,477	594,226	630,425	4.6%
무주군	590,453	618,911	626,209	573,333	-1.0%
장수군	534,164	550,863	603,202	546,368	0.8%
임실군	699,738	697,300	714,144	782,850	3.8%
순창군	712,563	752,790	736,737	720,399	0.4%
고창군	1,328,184	1,409,978	1,481,276	1,752,668	9.7%
부안군	1,306,282	1,281,819	1,415,039	1,462,804	3.8%

출처 : 통계청(2019)

- 도내 제조업 생산액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도내 제조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군산·완주 등 주요 공업지역의 제조업 생산액 감소에 기인하고 있음
 - 전라북도의 지역내총생산은 2015년 약 47.0조 원에서 2018년 약 50.8조 원으로 증가했으나, 동기간 제조업의 총생산액은 11.59조 원에서 11.37조 원으로 오히려 감소함
 - 동기간 군산시의 제조업 생산액은 약 3.8조 원에서 약 3.2조 원으로 감소함
 - 완주군의 제조업 생산액도 2.28조 원에서 2.18조 원으로 감소함
 - 익산시의 제조업 생산액은 증가했으나, 시 총생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6.2%에서 34.5%로 감소세에 있음
- 특히 지역 핵심 산업체가 연달아 철수한 군산시는 2015년 이후 지역내총생산이 지속 감소하는 등 제조업 위기가 지역 전체의 위기로 확장됨
 - 군산시는 2018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22년까지 연장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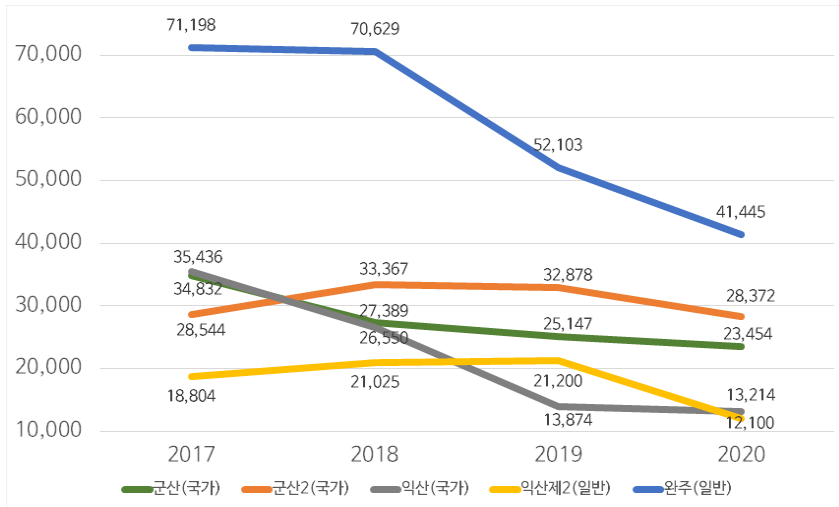
〈그림 3-10〉 2015~2018년 전라북도 및 군산·익산·완주 제조업 총생산액 추이

- 주요 사업체의 조업중단·생산물량 감축이 정상화되지 않으며 협력업체가 밀집한 주요 산업단지의 활력이 급격히 감소하였음
- 완주테크노밸리, 전주과학산업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신규조성 산업단지는 성장세
 - 21년 1분기 기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입주업체는 31개소, 생산액은 929억 원 수준을 보이고 있음

〈표 3-3〉 전라북도 주요 산업단지별 생산액 추이

구분	단위 : 억원			
	2017	2018	2019	2020
군산(국가)	34,832	27,389	25,147	23,454
군산2(국가)	28,544	33,367	32,878	28,372
군산(일반)	45,641	41,232	48,725	51,640
익산(국가)	35,436	26,550	13,874	13,214
익산제2(일반)	18,804	21,025	21,200	12,100
완주(일반)	71,198	70,629	52,103	41,445
전주과학(일반)	10,512	10,529	22,656	26,698
완주테크노밸리(일반)	861	1,967	9,866	12,405
김제지평선(일반)	3,986	7,130	16,243	14,612

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2021)



〈그림 3-11〉 2017~2020 전북 주요 산업단지별 생산액 추이
(억 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다. 광역문제 빈발

- 코로나 19 대유행, 새만금 유역 수질 문제 등 시·군 단위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광역적 재해재난과 사회문제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미세먼지, 악취, 비점오염,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적 측면에서 광역문제가 두드러짐
 - 새만금유역 수질 통합관리체계는 광역적 협력의 우수사례로 활용 가능함
- 전주·완주 행정통합, 새만금 관할권 갈등 등 지자체 간 행정갈등도 풀리지 않은 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 새만금이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산·김제·부안 간 관할권 갈등의 행정적 합의점은 찾기 어려운 실정에 있음
- 대형 SOC 사업에서 전라북도 현안이 원활하게 반영되지 못하며, 지역쇠퇴를 타개하고 광역권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중점기능의 신속한 마련이 지체되는 상황임
 -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북 현안 미반영 되는 등 등 지역 핵심 철도교통 사업이 거둬 고배를 마심

- 특히 4차 철도망계획 광역철도 구축 선도사업에서 비수도권 광역 시·도 중 전북만 제외되어 균형발전과 광역권 형성에 큰 타격을 입음
- 노을대교, 새만금국제공항 등 주요 SOC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상황임
- 전라북도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기능해야 할 새만금 개발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요구 됨
- 선도사업인 새만금국가산업단지의 분양률 및 가동률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새만금 개발은 국가사업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책임감 있는 사업진행과 전폭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필요
- 그린에너지,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사업 등 대형 국비사업을 계기로 연쇄적인 개발 파급효과를 유도할 필요성이 대두 됨

3. 종합여건 및 시사점

가. 인구·산업의 지역 착근성 약화

- 국가적으로 저출산·노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전라북도는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인구가 빠르게 유출되며 인구구조의 노령화·과소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
- 전라북도 뿌리 기업의 조업 중단과 생산물량 감축이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전라북도의 신성장거점인 새만금의 개발이 속도감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대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협력업체 클러스터에 해체 압력이 증가함
 - GM군산공장 철수, 현대중공업 조업중단 장기화 등 도내 핵심 대기업을 생산여건 악화가 장기화 하고 있음
- 산업 약화에 따른 고용위기는 청년층 인구의 유출로 이어지며, 청년인구의 유출은 다시 혁신역량의 악화로 이어지는 인구·산업의 악순환으로 이어짐
- 1차산업의 비중이 높은 군 지역의 노령화는 심각한 수준이며, 마을을 중심으로 형성된 농·어·산촌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임
- 인구·산업의 지역 착근성 약화는 인구구조의 노령화, 산업구조의 저차화로 귀결되며, 이는 최종적으로 돌발적 사회현상·자연재해에 대한 지역사회의 적응력과 회복력을 감소시킴
- 인구·산업의 재활성화를 위한 다방면의 정책이 동원되고 있으나 성과는 미진한 실정임

나. 시·군의 정책흡수력 약화로 인한 정책비용 증가

-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산업의 생산성이 감소할수록 대응정책·재활성화 정책에 대한 지역의 정책 흡수력이 낮아짐
- 정책 흡수력이 낮아질수록 일정한 성과를 내기 위해 투입되어야 할 정책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편익분석·예비타당성 조사 등 정책사업의 경제성 평가 과정에 다시 악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으로 이어짐

- 전라북도의 높은 노령화와 산업침체는 경제성 평가를 요구하는 각종 정책사업 시행에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함
 - 균형발전 예비 타당성 면제사업 이후 주요 광역SOC 구축 계획에 전북 현안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적기에 광역기반시설을 확충하지 못하여 지역 재활성화의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상존함
- 전라북도 내 광역시가 없어 광역교통망법에 근거하는 광역철도 등 광역권 형성을 위한 국비사업 선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다. 지역문제의 광역화로 인한 광역 행정수요 증대

- 새만금호 수질 논란·용담호 물 분쟁 사례 등 시·군 단위를 넘어 광역적 차원의 대응·해결을 요구하는 환경·생태 이슈가 증가하는 추세임
- 새만금 관할권 관련 주변 지역의 행정구역 갈등, 전주-완주 통합 논의 등 정치·행정적 차원의 광역적 이슈 또한 빈발하고 있음
- 코로나-19의 대유행 및 방역 또한 보건·의료·행정정책이 광역적 행정 단위에서 작동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함
- 광역화된 지역문제는 대응체계 및 공간구조의 광역화를 통해 대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종합적 공간계획이나 부문별 실행계획의 수립은 미진한 실정
 - 새만금유역 수질관리계획 등 광역적 부문별 실행계획 일부 시행 중에 있음
- 단발성 이슈나 개발사업에 도시·군 기본계획의 큰 틀이 좌지우지되며, 돌발적 위기와 급격한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공간의 재구조화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임
- 도·시군 지역의 장기발전방향·도시구조·부문별 정책방향 설정에 있어 주변지역과의 연계협력 및 기능분산을 고려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이 되어 줄 중간단계의 공간계획이 부재함
 - 2009년 수립된 전주권 광역도시계획 외에는 뚜렷한 광역 공간계획이 부재하여 새만금권 주변지역의 공간구조와 기능분산을 다루기 위한 계획 기반이 부실함

라. 새만금 개발 파급효과를 기반으로 한 지역계획의 부재

-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이 국가적 의제로 격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개발과 정에서 주변 지역에 미칠 긍정·부정적 파급효과에 관한 사례연구 및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은 미진함
 - 새만금 조성으로 인해 미래 신산업·신기술에 대한 파급효과가 전라북도에 끼치는 영향은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동시에 새만금 계획인구 27만 명 달성 과정에서 인접 지역의 인구·자본 유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음
- 새만금 주변지역의 인구, 산업 착근성이 지속적으로 약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만금 조성은 지역개발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새만금의 긍정적 개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광역단위의 공간구조 조정과 주요 부문별 발전방향 및 관리방안이 종합적으로 제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계획적 기반마련은 미진한 실정임
- 새만금 기본계획의 재정비를 통해 새만금 개발사업의 실행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만큼, 단계적 개발계획을 고려한 주변지역과의 연계 방안을 제시하여 점진적인 광역권 형성을 도모할 필요성이 대두됨



〈그림 3-12〉 새만금권 주변지역 종합여건과 대응방향

4

장

새만금권 광역도시계획 필요성 및 공간구상

jeonbuk institute

-
1. 새만금권 광역도시계획의 필요성
 2. 대안별 새만금권 광역도시계획의 공간구상
 3. 새만금권 광역도시계획의 축 구상
 4. 공간구상 종합

제4장 새만금권 광역도시계획 필요성 및 공간구상

1. 새만금권 광역도시계획의 필요성

가. 새만금을 중심으로 주변지역과의 연계발전 방안 마련 필요

- 인구의 지속적 감소 및 고령화에 의한 도시의 경쟁력이 날로 저하되는 상황에서 새만금권 광역도시계획은 새만금과 주변지역의 동반 성장을 통해 지역발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의 기회를 제공함
- 새만금 주변지역은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빨대효과로 도시의 경쟁력이 쇠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에 따른 주변지역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장치로서 새만금권 광역도시계획의 필요성은 더욱 높다고 볼 수 있음

나. 광역협력체계를 통한 사회적 비용 저감 가능

- 새만금특별법을 통해 새만금 광역기반시설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나, 광역교통, 상하수도, 전력, 가스, 환경 등이 새만금 구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집행 및 관리차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변지역과의 광역협력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새만금사업은 공사기간 만으로도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라 발생되고 있는 사회적 비용을 저감하기 위한 장치로서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을 통해 편익 창출을 위한 기회 제공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다. 새만금 개발에 따른 주변지역으로의 확산효과 극대화

- 새만금 기본계획에서 그리고 있는 ‘그린에너지와 신산업 허브’, ‘스마트 기반 수변도시’, ‘친환경 첨단 농업 육성’, ‘글로벌을 겨냥한 관광·생태 도시’, ‘세계로 열린 경제특구’는 그 영향력이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국가전체에 미치는 사업임
- 재생에너지 3020 등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확대되고 수소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의 향후 역할이 커짐에 따라 주변지역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역 효과적인 전략이 필요함
- 이처럼 새만금에 조성되는 대규모 산업단지 및 관광레저단지와 글로벌 교통인프라 등에 따른 효과가 단순히 새만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변지역까지도 확산되어 국가차원에서 새만금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함
- 따라서 새만금권 광역도시계획은 우선적으로 인접한 전라북도로의 효과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

라. 새만금을 포함한 전라북도 잠재력의 재검토와 지역계획 반영

- 새만금권 광역도시계획은 그간 새만금 기본계획의 고유의 영역에 한정되어 있던 새만금의 공간범위를 전라북도 전역으로 확장하여 해석한 최초의 시작점으로서 의의를 가짐
- 새만금에 대한 행정구역 등 관할에 대한 방법이 결정되지 않았으나 새만금을 광역시 이상의 독립된 신도시로 가정하고 전라북도와 서로 주고받을 상호관계를 가늠할 수 있게 함
- 전라북도 내 광역시의 부재로 인해 다양한 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만금개발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주요한 대안으로 설정하고 새만금 전주권을 핵심으로 전라북도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상위 지위를 갖는 지역개발 계획으로 새만금권 광역도시계획은 그 하위계획에 대한 파급력도 클 것으로 전망됨

2. 대안별 새만금권 광역도시계획의 공간구상

가.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를 반영한 영역

- 새만금과 행정경계가 맞닿아 있고 현재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새만금 개발 사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군산, 김제, 부안을 1차 영역으로 설정하고자 함
- 광역도시계획권 설정 기준 : 새만금 중심 인접 시군(군산·김제·부안)



〈그림 4-1〉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를 반영한 권역

① 장점

- 이미 새만금청과 군산·김제·부안지자체, 시민단체로 구성된 협의체가 새만금 주요 현안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고 있어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후속 단계에서의 행정 처리가 용이할 수 있음
- 군산시는 새만금 산업연구용지와 신공항 및 농생명용지가 맞닿아 있으며, 특히 산업 측면에 있어 새만금 미래산업 성장에 따른 군산시와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김제시는 새만금 동서 2축 간선도로를 통해 새만금과 직접 연계되고 현재 전라북도 역점 도정과 연관된 농·생명산업 인프라가 밀집해 있어 새만금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농생명산업의 공간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음
- 부안군은 새만금의 농생명용지 및 관광레저용지와 행정경계를 접하고 있어 새만금 관광산업의 배후 도시로 밀접한 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관광·해양 신재생에너지 도시로서의 미래상을 공유하고 있어 관광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거점형성이 가능함
- 군산, 김제, 부안은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조정에 대한 법적 분쟁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지역⁵⁵⁾으로 새만금 관할에 관한 세 지자체의 합의가 쟁점임

② 단점

- 전주시, 익산시 등 전라북도 대도시 제외
 - 전라북도 중추기능이 밀집해 있는 전주시, 익산시, 완주군은 배제한 공간 영역으로 새만금의 배후 도시로서 전주, 익산, 완주의 기능설정 없이는 새만금의 파급력 이동이 사실상 어려움
 - 실제 새만금 기본계획에서의 계획인구 중 유발 인구는 전주권을 포함하고 있음
- 새만금 파급력의 축소 해석의 여지
 - 새만금은 국가사업으로서 대한민국 그린에너지·그린성장 거점 역할을, 넓게는 국제도시로의 역할을 목표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2차 파급 영역을 상대적으로 협소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음
 - 새만금과 행정경계를 직접 접하고 있는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여 광역 설정 논리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
 - 실질적으로 협의체의 의사결정권한이 크지 않고 갈등 해소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아 세 지자체간의 의사합의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 있음

55) 전라매일 '21.1(<http://jlmaeil.com/view.php?idx=197521>)

나. 전주광역도시권 확장

- 새만금과 2025년 전주권 광역도시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군산, 김제, 전주, 익산, 완주 행정구역 전역을 결합한 구역
- 광역도시계획권 설정 기준 : 전주권 광역도시권에서 새만금 지역까지 확장



〈그림 4-2〉 전주권 광역도시계획을 반영한 권역

① 장점

- 전주시 광역권의 공간범위 수렴, 전라북도 대도시 모두 포함
 - 전라북도내 인구, 산업, 행정, 문화 기능이 집적된 대부분의 시지역과 지역산업이 특화되어 있는 완주군이 포함되어 사실상 전라북도 대도시 모두를 아우르는 공간 영역
 - 전주권 광역도시계획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전라북도 중추권의 긴밀한 연계협력을 도모한다는 취지가 부각될 수 있음
- 전라북도 신산업·농생명에너지 중심축 설정이 가능한 공간구조
 - 새만금에서 시작한 미래 신산업축이 군산시의 친환경 전기 차 강소경제특구, 익산시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전주시의 친환경첨단복합단지로 이어질 수 있는 공간 구조임
 - 새만금에서 시작한 농·생명산업이 김제시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완주 혁신도시의 농축산 인프라와 연결되어 농·생명산업 광역 축을 형성할 수 있는 공간구조임

② 단점

○ 전라북도 서남권 생활권의 배제

-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부안군, 고창군, 정읍시를 광역권에서 배제하여 새만금의 파급력을 전라북도 중추권으로 제한한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
- 정읍시는 KTX 고속철도 정차역으로 새만금권과 광주전남권을 연결하는 중추역할이 가능함

○ 중국·환황해권을 겨냥한 글로벌 성장벨트 수렴의 어려움

- 부안군, 고창군의 배제로 인해 전라북도 종합계획에서 설정하고 있는 군산시-부안-고창 해안지역의 중국·환황해권 성장 벨트를 수렴하기 어려운 구조임

다. 전주광역권과 서남권의 반영

- 김제, 전주, 익산, 완주의 전주광역권에 고창·부안·정읍 서남권 영역을 결합한 영역으로 동부 산악권이 제외된 전 지역을 의미
- 광역도시계획권 설정 기준 : 새만금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1시간(70km) 접근거리 포함하여 중심성 강조
- 새만금개발 초기단계에서는 전주권 중심의 공간중심체계 구축하고 추후 새만금 추진상황에 따라 점차적으로 새만금 중심의 공간중심체계 보완 필요



〈그림 4-3〉 전주권 광역도시계획과 서남권을 반영한 영역

① 장점

- 새만금의 파급력을 동측, 북측, 남측 모두로 해석한 영역
 - 새만금 조성에 대한 파급력을 동측 대도시권, 북측 해안 및 신산업권, 남측 관광 및 신재생에너지 모든 방향으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 있는 영역임
 - 생활권이 분리된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남원시 동부 산악권을 배제한 전 지역으로 새만금의 파급력을 서부권 전 지역으로 확장한 구역임
- 새만금으로의 급격한 빨대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 수립 가능
 - 새만금과 1시간 이내의 거리, 전주시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생활권을 포함한 지역으로 사실상 새만금 준공 시 예측되는 급격한 빨대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범위임
 - 주거, 산업 등 광역적 토지이용, 자원의 재분배로 새만금으로의 빨대효과를 방지할 수 있는 완충 계획을 수립할 가능성이 있는 범위임
- 전라북도 종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장 축, 연계벨트 수립 가능
 - 전라북도 종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새만금 - 동부산악 - 대구·경북권의 생태문명축과 세종·수도권 - 전주 - 광주·전남의 혁신성장축의 반영이 가능한 공간구조
 - 전라북도 종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로벌 성장벨트 수립이 가능하여 중국·환황해권을 향한 군산 - 새만금 - 부안 - 고창의 강력한 광역기능 설정이 가능한 범위

② 단점

- 새만금-포항고속도로 완공에 따른 동부권 접근 향상의 잠재력 배제
 -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2023년 개통될 시 전라북도 동부권 지역과 새만금지역이 1시간 이내 거리로 가까워짐에 따라 전라북도 생활권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음
 - 현재 계획으로 머물러 있으나 무주~대구간 고속도로가 완공 될 시 새만금 영향력이 전라북도를 넘어 경상북도까지 확장될 가능성 있음
 - 고속도로 완공에 따른 새만금 영향권 확장을 수립하기 어려운 공간 범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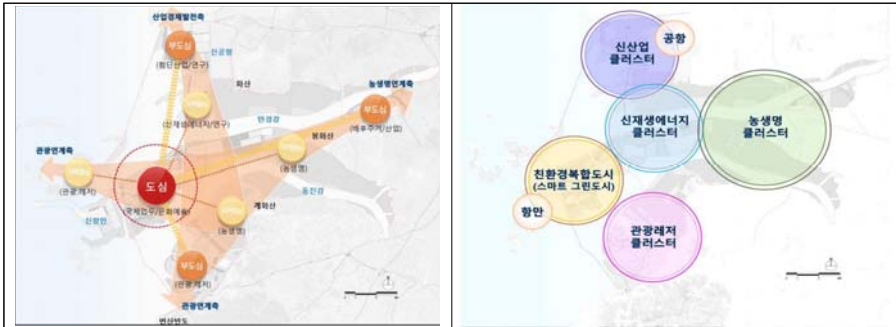
라. 새만금권 광역도시계획을 위한 공간구상 제안(안)

- 현재 새만금은 매립과 조성, 기반시설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이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새만금 기본계획(2021)에 따르면 2050년까지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새만금의 도시적 기능 확보와 인구유입 등이 어느 정도 확보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새만금권 광역도시계획의 필요성은 우선적으로 매립과 조성을 통해 새롭게 조성되는 새만금과 더불어 인접하고 있는 지역과의 지속가능한 발전 유도하고 새만금의 도시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인접 지역과의 도시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공간단위를 재편성하는데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새만금권 광역도시계획을 위한 공간범위는 현재 초기 단계에서는 새만금과 인접지역인 군산·김제·부안으로 설정하여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과 인접지역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새만금사업이 안정화되고 인구유입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도시적 기능이 구현되는 시점 이후의 새만금 광역도시권은 인접지역과 더불어 광역적 차원에서 전라북도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단계적 접근이 요구됨
- 나아가 지역 발전 강화를 위한 전주권 광역도시계획과 새만금광역도시계획과의 상호보완적인 결합과 나아가 전국적인 초광역 메가시티에 대응하기 위한 전라북도형 강소메가시티 전략 수립이 필요함
- 종합하면 새만금권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은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과 함께 주변 인접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중요하며, 광역도시권 설정에 있어서는 초기 단계에서는 새만금과 군산·김제·부안 등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설정하고, 추후 장기적으로는 새만금광역도시권과 함께 기존 전주광역도시권의 통합과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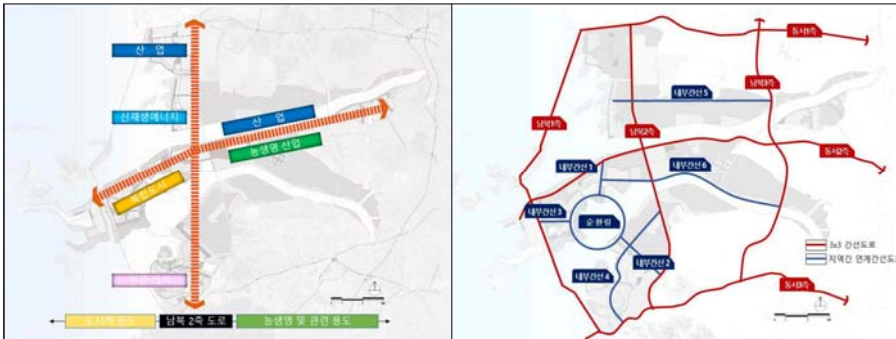
3. 새만금권 광역도시계획 축 구상

■ 새만금 기본계획의 축 설정 현황

- 새만금의 공간구조는 2권역과 3권역 사이 형성되어 있는 복합용지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뻗어 나가는 방사형 성장구조를 계획하고 있음
- 도시발전 및 기능 배치는 십자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북측에 신재생 및 농생명, 남측에 CBD와 관광·레저기능이 입지하는 것으로 계획됨
- 광역교통망은 남북축, 동서축 각 3개씩의 격자 도로망을 골조로 CBD 구역을 순환하는 내부 도로를 추가 계획하고 있으며 전라선이 새만금 내부까지 연장됨
- 녹지축은 방조제와 남북2축을 따라 남북방향으로, 수변축은 만경강과 동진강을 따라 김제시를 거쳐 전라북도 내부로 진입하는 동서 방향 축을 구상하고 있음



〈그림 4-4〉 새만금 도시공간구조 및 축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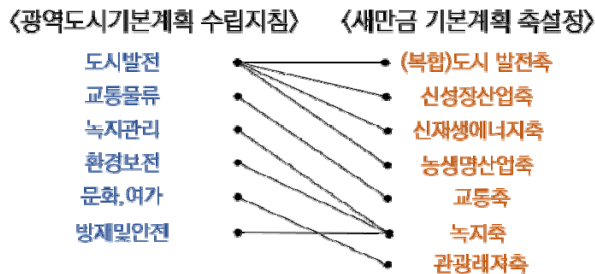
〈그림 4-5〉 새만금 도시발전 축 및 광역교통망 계획



〈그림 4-6〉 새만금 녹지 축 및 수변 축

■ 새만금 축과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의 중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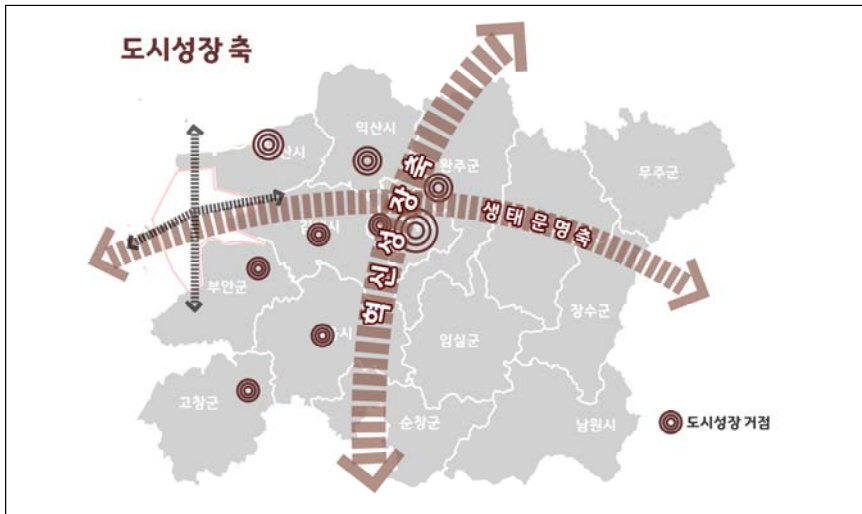
-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에서는 계획의 장단기 목표를 반영하여 도시발전 축, 교통축, 녹지축을 따라 도시의 기능을 분담과 녹지관리, 환경보전, 경관, 문화·여가, 방재 및 안전 분야의 추가적인 축 수립을 규정하고 있음
- 새만금 기본계획에는 8개의 축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를 광역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과 중첩하여 살펴보았을 때 도시발전, 교통, 녹지관리, 환경보전, 문화여가, 경관, 방재안전 영역과 연결되어 지침상의 기본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
 - 도시 미래상을 반영한 도시발전 축이 복합도시 발전 축, 도시발전 축, 신성장산업축, 신재생 에너지축, 농생명 산업축으로 세부화 되어 있는 특징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복합)도시성장축, 신성장산업·농생명산업·신재생에너지축, 문화여가축, 교통축 측면을 고려하여 축을 검토하고자 함



〈그림 4-7〉 광역도시기본계획과 새만금 기본계획 축 설정의 중첩

가. 도시성장 축

- 새만금권 광역도시계획 도시성장 축은 전라북도 종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남북 방향의 혁신성장 축과 동서방향의 생태문명 축을 수렴하는 안을 구상할 수 있음
- 동서방향의 생태문명 축은 새만금에서 시작하여 김제시 - 완주혁신 - 전주시- 동부산악권을 지나고 있어 새만금과 동서내륙을 연결하는 강력한 축으로 설정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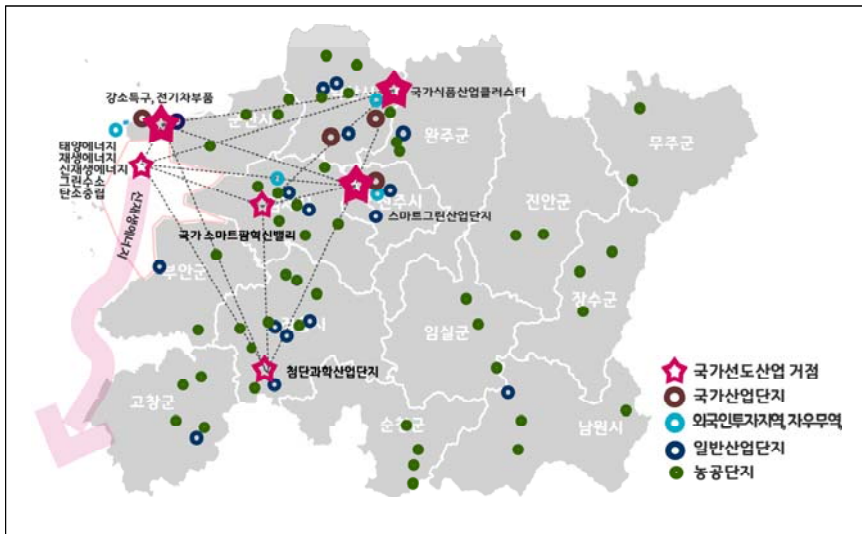
〈그림 4-8〉 새만금권 광역도시계획 도시성장 축 구상

나. 신성장산업 축

- 새만금의 핵심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그린 수소, 태양에너지 산업의 연계를 도모하고 2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가이드가 필요한 상황임
-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따른 전기 차 부품소재 특화, 김제에 진행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국가 시범사업,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전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등 국가 핵심전략으로 추진 중인 사업과 새만금 기능과의 연계방안이 필요함
- 새만금에서 시작한 신재생에너지를 부안군과 고창군까지 확장시켜 서해안의 강력

한 선형산업축 설정이 가능함

- 현재 전라북도 내 국가산업단지는 군산시, 익산시, 전주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군산시와 김제시는 자유무역지역이,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에는 외국인투자지역이, 전주시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음⁵⁶⁾
 - 농공단지는 14개 시군 전역에 흩어져 있으며 59개소, 면적은 11,326천㎡를 보임
-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 전주 첨단산업 - 정읍의 일반산업단지 - 고창군의 일반산업단지를 기반으로 남북방향의 신성장산업축 설정이 가능함
- 종자산업 기반의 김제 - 농축산 중심의 혁신도시 - 미래 신산업 새만금으로 연결되는 동서방향 축을 메인 축과 연결시킬 수 있음
- 상대적으로 국가 선도산업 거점이 부재하고 있는 동부권 지역에 대한 대응책이 광역차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함



〈그림 4-9〉 새만금권 광역도시계획 신성장산업 축 구상

56)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 산업단지 현황지도(2020), p.22

다. 농생명산업 축

- 새만금의 주요 목표가 되고 있는 친환경 첨단 농업 육성 거점을 실현시키기 위해 기존 혁신도시, 김제에 집중되어 있는 거점시설과의 연계방안이 필요함
-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동부산악권 지역을 고원농업, 경관농업이 특화 될 수 있는 클러스터를 구상하고 새만금-김제-새만금-동부권 농업클러스터로 이어지는 동서방향의 강력한 축 설정이 필요함
- 현재 전라북도에 입지해 있는 농생명산업관련 시설은 크게 종자·첨단농업, 수산, 동물의학, 미생물·마이크로바이옴, 농축산, 테크노·기술, 국가식품으로 구분됨
 - 특히 부안군은 신재생에너지 외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와 한국수산자원공단이, 군산은 국립갯벌연구센터가 입지하고 있어 서해안 수산자원 개발에 대한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음
- 공간적으로 전주 주변을 중심으로 새만금-김제-완주로 이어지는 선형 축을 이미 형성하고 있어 광역화에 대한 추가 전략이 필요한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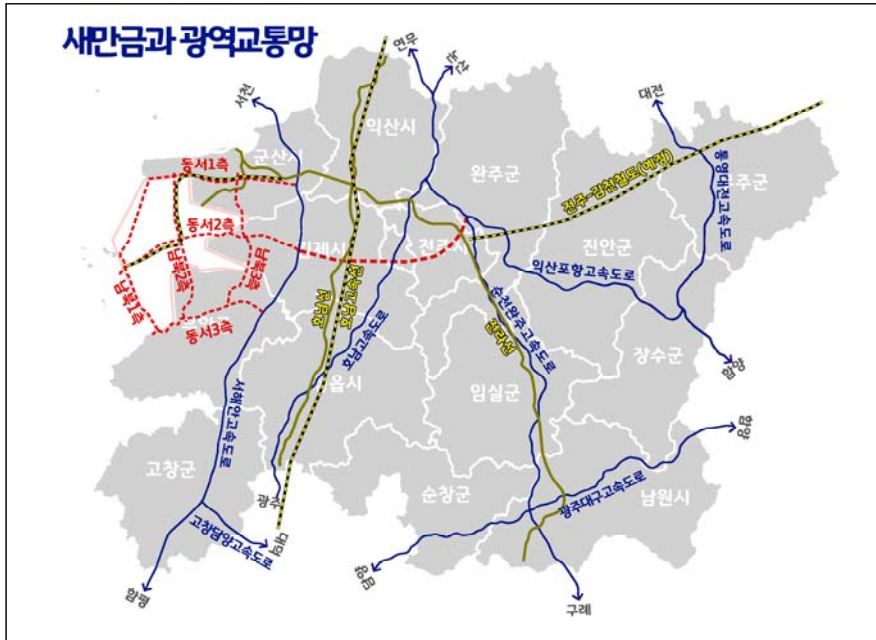
〈그림 4-10〉 새만금권 광역도시계획 농생명산업 축 구상

라. 교통물류 축

- 새만금에서 광역도로망 체계를 위해 제시되어 있는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및 국도 신설, 새만금~지리산 및 새만금~고창 국도 신설사업이 광역에 미치는 영향력과 후속사업의 전개가 필요함
- 특히 새만금 신공항과 새만금 수상교통체계의 시종점이 되고 있는 부안의 30번 국도, 김제의 702번 지방도에 대한 장기종합교통계획이 시급한 실정임
- 새만금 행정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수상교통 노선을 위로는 군산, 아래로는 부안과 고창까지 연장시켜 새만금에 도착한 관광객이 주변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시킬 필요가 있음
- 새만금의 동서 1축, 동서 2축, 동서 3축 교통망은 각각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으로 연결되는 구조이며, 모든 교통축이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계되어 남북방향으로의 접근성이 수월한 상황
- ‘새만금~포항’ 고속도로는 전라북도와 경상북도의 공동 숙원사업이나 현재는 추진이 미진한 사업으로 새만금 복합도시 준공 이후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재조명해야 함
- 새만금권 광역도시계획에서는 남북축 방향보다는 동서방향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신교통수단의 추가 공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4-11〉 새만금내 공항노선과 수상교통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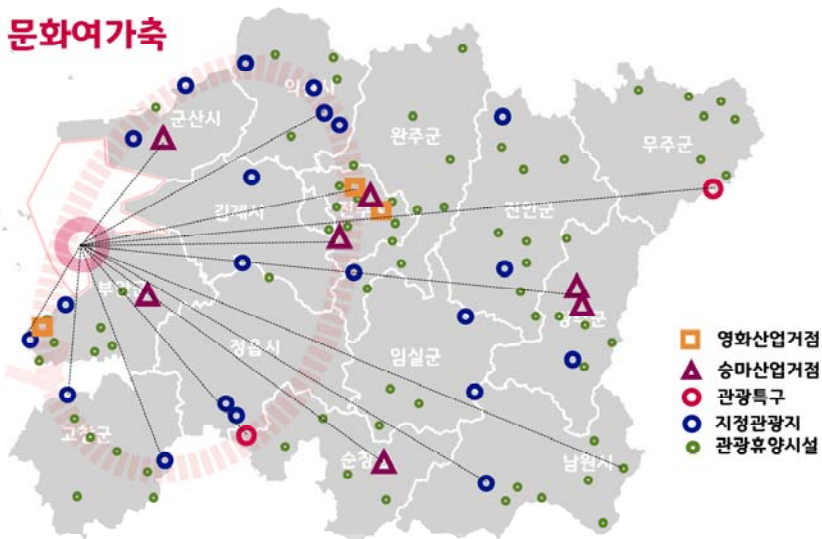
〈그림 4-12〉 새만금권 교통망과 전라북도교통망 현황

마. 문화여가 축

- 새만금에서 새만금 신항만 조성과 함께 계획한 주요한 목표로 설정되어 있는 국제 크루즈 관광객 유치, MICE육성에 대한 파급력을 전라북도로 흡인시키기 위한 후속계획이 필요함
- 새만금 기본계획에서 주변 연계관광에 대한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승마, 요트, 영화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광역 가이드 및 전략이 필요함
 - 승마는 장수가, 영화는 전주와 완주가 전략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나 마리나에 대한 인프라가 부재하고 마리나 육성에 대한 전라북도의 대응이 미진함
- 새만금에서 출발하고 있는 관광수요가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생태자연, 농촌체험, 공원 등과 결합하여 체류기반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고도화전략이 필요함
- 무주구천동·마이산·내장산 관광특구·부안군 변산반도, 익산의 미륵사지, 전주의 한옥마을 등 시군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 관광지는 이미 확보하고 있으므로 새만

금에서 시작하여 14개 시군과 바로 연계될 수 있는 관광 시스템이 필요함

- 새만금 기본계획에서는 관광·레저 기능이 복합용지에서 시작하여 부안군에 가까운 남측에 입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부안-고창을 지나 정읍에 이르는 남부권 관광지와 자연스러운 연계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
- 새만금의 관광·레저 권역을 중심으로 뛰어난 자연경관을 갖춘 부안·고창을 거쳐 전주·익산의 역사문화자원, 군산의 근대문화·해안자원의 순환적 연계를 도모할 수 있는 축 설정이 가능함
- 특히 새만금 수변관광 체험 후 동부권의 산악체험이 연결되어 문화관광에 대한 다채로운 체험이 이어질 수 있도록 완주·전주·임실지역의 가교역할이 필요함



〈그림 4-13〉 새만금권 광역도시계획 문화여가 축 구상

바. 환경보전 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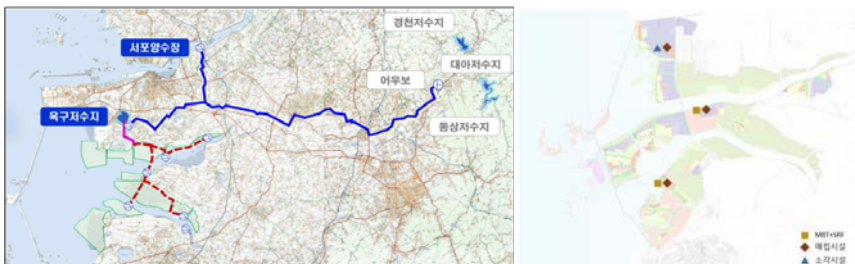
- 만경강을 따라 형성되어 있는 새만금의 강력한 수변 축을 김제, 익산을 지나 발원지 완주군 동상면의 밤샘까지 연장하여 후속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 만경강과 더불어 새만금의 주요한 수변 축을 형성하고 있는 동진강 역시 물줄기가 부안을 지나 정읍 내장산 발원지까지 이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연장하여 그린 네트워크 구상에 대한 가이드 제시가 필요함
- 새만금 기본계획에서는 반영하고 있지 않으나 장수군에서 발원하여 군산과 익산을 지나 서해로 흘러가는 금강에 대해 새만금의 친수계획이 영향 받을 수 있도록 비전이 변경될 필요성이 있음
- 방조제를 따라 남북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는 새만금 녹지축을 수렴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변산반도 국립공원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 및 관광압력이 전면 재검토되어야 함



〈그림 4-14〉 새만금권 광역도시계획 환경보전 축 구상

사. 용수 및 폐기물

- 새만금 기본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251,680㎥/일, 2040년까지 302,906㎥/일 대량의 용수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 신규 용수를 새만금으로 끌어 오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음
- 농생명용지에 요구되고 있는 대량의 용수를 처리하기 위해 옥구저수지, 서포양수장을 활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이는 전라북도 전체 물 공급 시스템이 조절되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내포하고 있음
 - 새만금 신규 공급으로 이해 공급량이 부족해지는 지역에 대한 환경·경제적 손실을 기반으로 이해관계자 간의 많은 협의가 필요한 상황임
- 특히 전라북도 용수 공업·농업·생활용수를 공급하는 핵심시설인 용담호 자체의 총량이 늘어나거나 신규 댐을 건설하지 않고서는 전라북도 물 부족 사태를 해결하면서 새만금의 용수를 확보하는 방안의 제시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전라북도 리싸이클링타운 매립장에 대한 행정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많은 사회적 문제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새만금에 계획되어 있는 대규모 폐기물 처리시설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필요 함
 - 새만금의 폐기물 발생량은 1단계 사업 조성 시 1,033톤/일 규모이며 하루 천 톤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 폐기물재활용·매립시설·소각시설이 총 6개 신설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그림 4-15〉 새만금권 광역도시계획 농업용수공급 및 폐기물시설 계획

4. 공간구상 종합

가. 광역도시계획권 설정 기준

- 새만금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광역도시계획권의 설정이며, 이는 공간상의 각각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논의와 협의 그리고 공론화가 요구됨
- 본 연구에서는 새만금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며, 그에 따라 새만금권이 포함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있어 사전적으로 검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간범위 설정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였음
- 제시된 대안은 총 3개이며, 각각의 대안은 광역도시권에서의 중심지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특히 기존 전주 중심의 광역도시계획권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가 중요한 요소로 적용하였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새만금권 광역도시계획을 위한 공간범위는 현재 초기 단계에서는 새만금과 인접지역인 군산·김제·부안으로 설정하여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과 인접지역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새만금사업이 안정화되고 인구유입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도시적 기능이 구현되는 시점 이후의 새만금 광역도시권은 인접지역과 더불어 광역적 차원에서 전라북도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단계적 접근이 요구됨
- 광역도시계획권 설정에 있어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을 중심으로 광역도시계획 권협의회 구성을 통해 적절한 기준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광역도시계획이 20년을 계획기간으로 설정하는 장기계획인 만큼 이를 고려한 공간영역 설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다만 새만금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광역도시권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공간상의 기능을 서로 연계하기 위한 것인 만큼 공간상의 연계성 및 공간영역에서의 동질성 등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음

1단계 : 새만금 협의회 중심구역



- 현재 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 중인 새만금과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행정구역

2단계 : 전주광역도시권 통합 또는 전라북도 서부권 확장



- 1단계 영역과 전주 광역도시권에서 제안하고 있는 전주시, 익산시, 완주군 흡수



- 1단계 영역과 전주광역도시권, 정읍시, 고창군 서남권의 흡수
- 동부권을 제외한 전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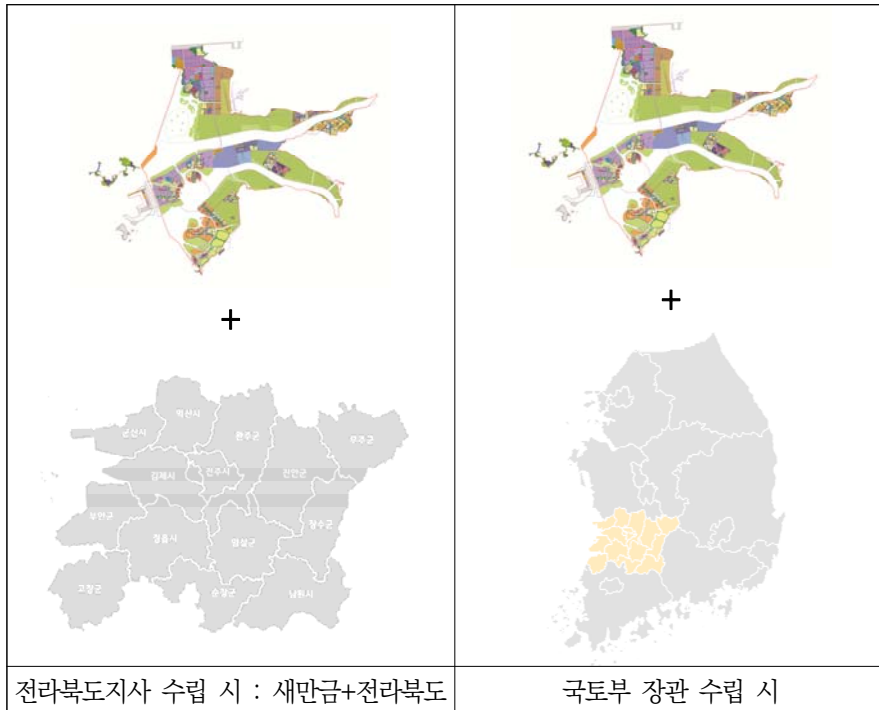
나. 계획수립 주체에 따른 공간영역 필요

- 새만금이 국가 기조가 실린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광역도시계획 수립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설정하여 추진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권자로 결정될 경우 새만금권 광역도시계획의 공간범위는 새만금과 전라북도를 넘어 국토 전체로 확장하여 해석될 여지가 있음
- 새만금을 중심으로 2시간 거리권에 위치한 세종시, 광주광역시와 더불어 중국 교역을 위한 인천·평택·보령·목포 항만이 광역계획의 주요한 거점이 됨
- 광역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새만금-전라북도-경상북도를 잇는 강력한 동서축 설정이 가능하여 국토운영의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는 균형발전을 위한 실행계획이 탄력 받을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권자로 결정될 경우 새만금권 광역도시계획의 공간범위는 새만금과 전라북도를 넘어 국토 전체로 확장하여 해석될 여지가 있음

○ 새만금을 중심으로 2시간 거리권에 위치한 세종시, 광주광역시와 더불어 중국 교역을 위한 인천·평택·보령·목포 항만이 광역계획의 주요한 거점이 됨

○ 광역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새만금-전라북도-경상북도를 잇는 강력한 동서축 설정이 가능하며 국토운영의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는 균형발전을 위한 실행계획이 탄력 받을 수 있음



〈그림 4-16〉 계획수립 주체에 따른 새만금권 광역도시계획의 범위

5

장

새만금 광역도시계획 수립 방향

jeonbuk institute

-
1. 새만금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방향
 2. 새만금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로드맵
 3. 연구 종합

제5장 새만금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방향

1. 새만금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방향

가. 실효성 중심의 공간계획 지침

■ 새만금의 국토 및 도시계획에서의 위상 제고

- 현재 새만금 관련 공간계획의 위계는 국토종합계획-전라북도 종합계획-새만금 기본계획으로 구성되는 형태임
 - 세종시의 경우 계획단계부터 특별자치시로 행정구역이 설정되어 주변 광역행정구역인 대전, 충북, 충남과의 동일한 위계 하에서 공간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이는 광역도시계획에 영향을 끼침
- 새만금이 아직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구분되지 않았고, 근거 법령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새만금 기본계획은 보편적 국토계획이라기보다는 새만금 개발 하위계획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독자적 계획이라고 보아야 함
 - 이러한 점에서 새만금 기본계획은 공간적으로 새만금 내부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한계가 있으며, 상·하위 계획과의 연계방안에 대한 고려는 다소 부족한 실정임
- 전라북도 종합계획은 도 전체의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의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추상적·선언적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음
 - 도 종합계획에서 권역별 기능·발전 축·발전방향이 제시되나, 도 차원에서 권역에 부여하는 기능·역할·비전이 권역 내 지자체들의 구체적 현황을 반영한 권역 구상과 상이할 수 있음
- 반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립과정에서 각 시군의 미시적 공간구조·개별적 현안에 따른 상이한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있음
 - 주요 현안에 대하여 시·군의 상이한 해석이 공간계획에 반영되어 도시·군 기본계획 간 정합성을 저해하고 갈등을 유발하고 있음

- 현재 새만금 주변지역을 포함한 도내 시·군의 공간계획은 계획연도·공간구상·발전방향·발전 축 등 전반적 부문에서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미흡한 실정임
 - 중장기적 비전 설정에만 집중하여 급변하는 사회적 이슈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어려우며, 거버넌스 및 모니터링 체계가 미흡함
 - 시·군 간 계획기간과 발전 축 구상이 상이하여 인접 지역 간의 시너지 창출 및 연계사업 발굴이 어려움
- 따라서 전라북도 종합계획의 추상적 비전을 현실적 실행계획으로 구체화하고, 도시·군 계획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방향성과 지침을 제공해 줄 중간 규모, 광역권 단위의 공간계획으로서 역할을 해야 함
 - 새만금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광역권 내 모든 시·군이 유기적 연계성을 지닌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여 도시 발전전략을 일체화 할 수 있음

■ 새만금 기본계획 - 도시·군 기본계획 연계방안 제시

- 새만금의 성공적인 개발 시 현재 전주 일극체제인 전라북도 공간구조의 다극화를 기대할 수 있음
- 따라서 새만금권 광역도시계획은 전라북도의 전체 공간구조에서 새만금의 위상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시·군의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 미래비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새만금을 전주 중심의 중추도시권과 동등한 거점으로 설정하는 계기가 되어야 함
- 청년인구·신산업 등 전라북도의 혁신역량이 집중될 새만금권의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광역거점으로 명문화하고, 새만금의 공간적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주변 지역의 역할을 제시하여 인접 시군의 공간계획에 구체적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2021년 변경된 새만금 기본계획에서는 새만금의 구체적 개발방안을 마련하였으나, 광역적 공간구조·기능분산·주변지역 연계 방안 등 광역권의 거점으로서 공간적 기능에 대한 논의 제한적임

- 새만금은 전라북도의 성장거점과 국가적 성장거점으로서의 다층적 성격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개발 이후 주변지역에 미칠 파급효과와 그 관리방안은 논의되지 않고 있는 실정
- 세종특별자치시·혁신도시 등 신산업 자족기능을 갖춘 대규모 신도시 조성이 주변 지역에 미친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사례검토 필요
- 새만금 기본계획에서는 새만금을 권역별로 자족성을 갖춘 다핵형 도시로 기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주변지역의 도·시군 기본계획은 새만금을 단핵도시로만 상정하여 발전 축 및 기능분산 계획을 수립함
- 새만금 기본계획의 새만금 내 권역별 기능분산 및 발전 축 구상을 볼 때 인접 시·군의 핵심기능을 고려했음을 짐작케 하나 인접 지역과의 구체적 연계방안까지 제시하지는 않고 있음
- 동시에 새만금 기본계획에서는 효율적 개발 추진을 위해 2050년까지 10년 단위의 단계별 개발계획을 수립했으나 시·군 단위 계획에서 이에 대한 고려는 부족한 실정
-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새만금의 다핵도시·복합도시로서의 공간구조를 강조하고, 새만금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새만금 내 권역들과 발전 축을 인접 지역으로 연장하여 해당 시·군의 공간구조·발전 축과 접속시키는 방안이 필요함
- 새만금의 권역별 기능과 인접 시군의 핵심기능을 공간적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토지의 용도별 총량제 등 다양한 계획적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공간구조 수립 과정에서 새만금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새만금 공간구조를 우선 반영하되, 광역도시계획권 내 시·군의 요구사항과 이해관계를 선제적으로 취합하여 계획 수립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방지해야 함
- 새만금의 10년 단위 단계별 개발 계획을 바탕으로 권역내 시·군의 미래 광역거점과 발전 축 설정 과정에서 시간적 범위에 따른 단계적·체계적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시킴
- 광역도시계획권 내 시·군에게 비교적 구체적인 기능분담계획을 제시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이 이러한 기능분산방안을 반영한 유기적·협력적 계획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해야 함
- 장기적으로는 도시·군 기본계획 및 경관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의 세부 이행계획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체계화된 지침이 필요함

나. 새만금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한 광역적 기능 배분

■ 새만금 중심의 네트워크형 기능배치 및 광역거점 재편

- 새만금에 조성될 광역시설 및 기능이 주변 시·군의 취약 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광역적인 기능분산·거점설정 방안이 필요함
- 광역권 내 중복기능은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중추도시권에 집중된 광역거점 기능을 새만금 개발을 계기로 다원화하여 광역권 전체가 단일한 생활권·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도할 필요가 있음
 - 새만금 신산업지구의 파급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새만금으로 광역권의 중심지 기능을 과감히 분산하여 전주-새만금 양대 거점 중심의 공간구조 형성을 도모해야 함
-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지향하는 네트워크형 광역권을 구체화하는 맥락에서, 권역 내 시·군의 장기적 비전과 시너지 유발이 가능한 공간적 기능 분산방안 및 연계 방안이 필요함
 - 새만금 개발구역의 성장관리와 주변지역 위기대응을 동시에 추구해야 함
 - 새만금의 권역별 기능과 인접 시·군의 공간구조 간 연계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점점 지역 활용방안 및 거점시설 발굴이 필요함
 - 광역거점과 배후지역 간의 유연한 기능적 연계성 형성을 도모하는 네트워크형 발전 축 구상이 필요함
- 거점 간·기능 간 연계성 증진을 위한 광역SOC 조성 방안 마련
 -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신항,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이미 시행 중인 광역교통·물류시설 조성 사업의 속도감 있는 집행 방안이 필요함
 - IT기술을 활용한 광역교통시설의 광역적 관리·활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광역권 연계의 핵심인 광역철도, BRT 등 광역교통망 구축 방안이 필요함
 - 새만금 남부-부안-김제 등 소외될 수 있는 지역은 김제역 등 현존하는 교통시설의 이용여건 개선 및 광역교통망과의 연결성 향상이 필요함
- 새만금에서 생산될 그린에너지의 광역적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녹색성장 거점으로 서의 위상과 파급효과를 주변지역으로 확산시킬 필요성이 있음

- 새만금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인근 산업시설과 연계하여 광역권 및 전라북도 전체 탄소배출량 감축 전략의 다각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 그린수소 복합단지에서 생산되는 수소에너지를 활용한 신교통수단을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그린성장 거점으로서의 위상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서남해 풍력발전단지 등 인접한 재생에너지 거점과의 연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에너지 중심의 연계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그림 5-1〉 고창·부안 풍력발전단지 위치도

- 전체적인 공간구조 계획 과정에서 새만금의 성장관리와 주변지역의 문제관리를 동시에 지향하는 광역도시계획의 목적성이 지속적으로 환기되어야 함
- 거점지역 중심의 압축적 도시구조·거점 간 네트워크 형성을 도모하여 새만금 주변지역이 새만금이 결여하고 있는 주요 기능을 보완하는 도시체계 형성이 필요함
- 공간구조와 도시체계 구상에 있어 지역별·산업별·도농별 특성을 세심하게 고려한 다층적 위계성을 지향해야 함

■ 생활필수시설 연계 강화 및 생활권 삶의 질 균등화

- 인구감소·노령화·지방재정 악화로 인해 신규 생활SOC 조성 여건이 거듭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

- 공간구조 재편·광역기능 연계와 더불어, 실제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 밀착형 SOC의 보완계획이 요구됨
- 생활 SOC의 광역연계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전라북도의 인구·산업·환경 특성을 반영한 생활 SOC 현황 분석과 이에 근거한 기초생활권 재설정이 선행되어야 함
 - 구체적 대상과 방법론을 갖춘 광역권 국토모니터링 체계 마련 필요
 - 실행력 제고를 위해 행정경계에 구속되지 않고 마을 단위의 지역주민 활동범위를 고려한 실질적 기초생활권 설정 필요
 - 광역도시계획에서 제시하는 생활권이 도시·군 기본계획에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 근거에 기반 한 생활권 설정 필요
 - 용도지역 총량제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압축적 생활권 형성 도모
- 물리적 연결성 증대나 효율적 배치 등 표면적 접근을 넘어, 광역도시권 내의 다양한 생활 SOC 시설의 공동이용계획 제안 등 질적인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계획적 근거 제시가 필요함
 - 신규 복지시설의 설치 대신 생활권의 거점복지시설을 설정하고 시설·인력 보완 및 광역교통망을 활용한 접근성 개선 방안 등 제시 가능
 - 시·군별, 부처별로 나뉘어 있는 생활 SOC 관리기능의 광역단위 통합 방안 제시
- 모든 생활권이 최대한 동등한 생활 SOC 접근성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부문별 계획 수립 과정에서 충실하게 제시해야 함
 - 광역도시계획권 내부에서의 연계방안과 더불어 광역도시계획권 인접지역의 생활 SOC를 접근성이 낮은 생활권과 연계하는 방안 제시
- 궁극적으로 광역권의 생활 SOC가 행정경계를 넘어 광역권 주민들의 공통재 (commons)으로 인식되고 활용될 수 있는 체계 마련

■ 새만금의 빨대효과 우려에 대한 사전대응

- 대도시가 인접한 중소규모 도시의 인구·산업을 흡수하는 대도시 집중현상의 전통적 의미의 빨대효과가 아닌, 세종시의 사례와 같이 질적으로 젊은 도시가 상대적으로 노후한 인접 대도시의 청년층 인구를 흡수하는 새로운 유형의 빨대효과 발생

- 세종시의 시·도간 전입인구 연령대 중 30대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⁵⁷⁾
- 세종시가 출범한 2012년 대비 2015년 충청남도 GRDP 약 10조 원 감소⁵⁸⁾
- 세종시 빨대효과 사례는 비수도권 지역에 충분한 자족 기능을 갖춘 신도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신도시가 주변 지역의 인구·산업을 급속하게 흡수할 수 있음을 보여줌
- 광역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세종시의 파급효과와 빨대효과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새만금 사업 단계별 주변지역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요인들을 발굴하여 사전 예방 방안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음
- 세종시 역류효과의 주요 유발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새만금 신도시의 주거·산업·행정 등 각 부문에 적용하여 양적·질적 역류효과 규모 측정이 필요함
- 새만금 2단계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상 유발인구 등 현 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예상 파급효과·역류효과 분석이 요구됨

다. 협력적 광역거버넌스 구축 광역화 확장의 기반 마련

■ 유연·개방·수평적 광역도시계획 거버넌스 구축

- 광역도시계획에서 설정한 내용만을 일시적·폐쇄적·형식적 거버넌스가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초광역화 의제에 대응할 역량을 갖춘 유연성과 개방성, 민-관-산-학이 수평적으로 참여하는 광역도시계획 거버넌스가 요구됨
- 시·군 간의 협력과 연대가 광역권의 동반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신뢰 하에서, 광역도시계획 거버넌스에서 광역권 내 시·군 간 수평적 관계성을 담보할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광역행정협의체의 실행력 담보가 우선시되어야 하며, 전략적 차원에서 독립적 예산 운용이 가능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선제적으로 설립하는 방안 고려
- 광역도시계획권의 실질적 초광역화 달성을 장기적 비전으로 설정하고, 초광역화 의제 부상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협의체로 과감한 분권이 필요

57) 대전세종연구원, 2018

58)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282750>

- 형식적인 시민참여를 지양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불협화음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주적 의사 반영 체계가 필요함
 -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 등 광역도시계획권 전체가 동의하는 목표를 중심으로 의제를 확장해가는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새만금 수질 논쟁, 새만금 관할권 갈등, 코로나-19 유행 등 돌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광범위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광역거버넌스의 부문별, 계층별 다양화가 필요함
 - 전략사업을 중심으로 거버넌스를 형성한 뒤, 전략사업에 따른 파급효과를 관리하기 위한 하위 거버넌스를 꾸려 가는 방식 등 거버넌스의 점진적 확장방안을 제시
- 전라북도 등 광역지자체와의 역할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수립과정에서 광역지자체 및 도시계획위원회와 지속적인 업무협약이 필요함
- 기존의 광역도시계획은 정책계획·전략계획으로 표방하나, 실제로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또는 광역 인프라 구축 등 특정 목적으로 수립되었음
- 기존 광역도시계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실제 집행수단의 법제화가 필요하며, 새만금권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광역도시계획의 한계를 벗어나 정책 및 전략계획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협업사업에 대한 실제 집행수단이 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함
 -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중앙정부-지자체로 구성된 새로운 형태의 광역 거버넌스를 구성함으로써 차별화된 접근 필요

■ 초광역화 기반 마련을 위한 전략사업 발굴

- 광역철도 등 광역권의 연계성을 증진하는 동시에 초광역화 계기 마련이 가능한 전략적 광역사업 발굴이 필요함
 - 광역철도, BRT 등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광역시설 사업을 구체화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수질·대기질·악취·감염병·자연재해 등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환경·안전 부문에서 광역사업 발굴이 수월할 수 있음

- 전략사업의 실행력을 담보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 예산만으로도 실현 가능한 사업 발굴이 요구됨
 - 광역 녹지 조성사업, 혐오시설 이전사업 등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도 신속하게 추진 가능한 사업안 도출 필요
 - 시행 중인 광역단위 사업에 지방비를 추가 투입하는 방식으로 속도감을 제고하여 광역권 연계성 증진을 모색하는 방안도 가능
- 새만금 유역을 대상으로 형성되어있는 각종 통합관리사업을 광역도시계획에 적극적으로 포함하여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의 계기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 녹지관리계획·환경보전계획의 공간적 단위를 시·군에서 유역이나 생태권 단위로 재편되어야 할 필요성이 상존하고 있음
- 대형 안전사고, 감염병 대유행, 화학물질 누출 등 광역범위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재난재해 위협에 대한 광역적 대응체계 구축 사업이 필요함
 - 통근권·생활권을 고려한 방재 및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재난대응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증진
- 올해 하반기 예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따른 종합지원 시책의 광역적 연계방안 마련 등 중앙정부 정책사업에 따른 전략적 대응방안 도출이 필요함

■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등 행정적 확장방안 검토

- 새만금 개발 완료와 동시에 종결되는 단발적 광역도시계획에 그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초광역권 형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행정적 확장방안이 광역도시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며 기존 지방자치단체와 별도의 행정권·예산권을 갖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이 가능해짐
- 새만금권 광역도시계획의 장기적 미래상을 광역권 시·군 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할 필요성 상존
 - 광역도시계획권의 연계·협력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된 이후 행정협의체를 거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진하는 점진적 추진방안,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광역도시계획권의 연계·협력 증진을 도모하는 전략적 추진방안이 모두 고려되어야 함

- 기초자치단체 연합형 특별자치단체를 우선 고려하며, 새만금·전주의 광역자치단체 지정을 통한 광역지자체 연합형 특별자치단체로의 확장방안 제시 가능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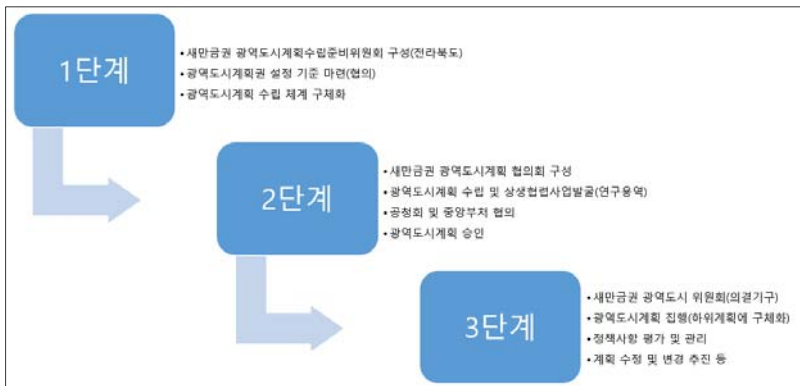
주민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중앙-지방 협력관계 제도화	중앙-지방 협의기구로서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운영	'자치발전협력회의' 설치 및 운영 : (의정) 대통령 (공동부의장) 국무총리, 시도지사협의회장
단체장 인수위원회 제도화	근거, 운영기준 등 미규정 되어 과도 운영 등 혼란 발생	광역 20명, 기초 15명 이내에서 임기 시작 후 30일 범위내로 단체장 인수위 자율 구성
특별지방 자치단체	특별지방자치단체 세무사항 미규정	광역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 구성 등 구체화
행정협의회 활성화	- 설립 시 지방의회의 의결 필요 - 중앙, 시·도 행·재정적 지원근거 미규정	- 설립 시 지방의회에 보고로 간소화 - 중앙, 시·도 행·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대도시 특례	대도시 인정기준 근거 미규정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행정적 명칭 부여하고 위임근거 마련

〈그림 5-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 협력관계 관련 주요내용 (자료: 행정안전부)

2. 새만금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로드맵

- 새만금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총 3단계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
- 1단계에서는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새만금권 광역도시계획수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광역도시계획권 설정 기준 마련 작업과 함께 광역도시계획 수립 체계를 구체화해야 함
 - 새만금권 광역도시계획수립준비위원회를 통해 광역도시계획권 설정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권에 포함되는 시군 뿐만 아니라 광역도 등의 선정과 함께 참여의사 등의 사전 협의가 필요함
 - 각 지자체의 참여 의사에 따른 광역도시계획권의 확정과 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수립 체계를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함
- 2단계에서는 새만금권 광역도시계획 협의회 구성과 함께 연구용역을 통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받는 절차가 포함됨
 - 새만금권 광역도시계획 협의회는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을 포함 광역도시계획권에 포함되는 시군 포함
- 3단계에서는 집행 및 관리 단계로 의결기구인 새만금권 광역도시위원회 구성과 하위계획의 구체화를 통한 광역도시계획의 집행 및 실효성 확대 그리고 평가 및 관리를 통한 추후 계획의 수정 및 변경 추진 등이 포함됨



〈그림 5-3〉 새만금 광역도시기본계획 수립 로드맵

3. 연구 종합

- 광역도시계획은 광역도시권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공간상의 기능을 상호 연계함으로써 적절한 성장관리를 도모하고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임
- 현재 새만금사업은 공공주도 선도사업,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등 속도감 있게 추진됨에 따라 새만금의 도시기능과 주변지역의 도시가능과의 연계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
- 본 연구에서는 새만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함께 전라북도 등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공간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한 새만금권 광역도시계획의 필요성과 수립방향 제시가 주목적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추후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양적 경제발전보다 실질적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고 광역권 외부와 유연한 연계·협력이 가능한 개방적 네트워크형 광역도시계획권 설정을 제시함
- 새만금권 광역도시계획 공간구상에 있어 1안) 새만금 주변지역, 2안) 기존 광역도시권 중첩, 3안) 전북 동부권 제외 전 지역 등 3개의 광역도시권 설정 안에 제시하였으며, 새만금 및 전라북도 주요 발전 축을 바탕으로 도시발전 축, 교통물류 축, 문화여가 축 등의 광역도시권 발전 축을 제안하였음
- 특히 새만금권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은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과 함께 주변 인접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중요하며, 광역도시권 설정에 있어서 초기 단계에는 새만금과 군산·김제·부안 등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설정하고, 추후 장기적으로는 새만금광역도시권과 함께 기존 전주광역도시권의 통합 및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음
- 이와 함께 새만금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있어 특히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실효성 중심의 공간계획 지침으로서의 역할, 새만금 파급효과의 확산 극대화, 협력적 광역거버넌스 및 초광역 기반 구축 등을 제시하였음

- 본 연구과제는 전라북도 차원에서 향후 새만금사업에 따른 새만금 주변지역 및 전라북도와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역도시권 설정 및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음
- 실제 타 지역 사례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있어 광역도시권 설정은 관련 지자체 및 지역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계획의 사전단계로의 준비기간을 통해 치열한 논의와 합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새만금권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을 중심으로 광역도시권 설정을 위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시작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과제를 시작으로 국가균형발전과 함께 새만금과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바임

■ 참고문헌

전라북도(2009), 2025년 전주권 광역도시계획, 전라북도
건설교통부(2007),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건설교통부
전라남도(2009), 2025년 전남서남권 광역도시계획, 전라남도
부산광역시,경상남도(2009), 부산권 광역도시계획(변경),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목포시(2019), 2030년 목포 도시기본계획, 목포시
무안군(2017), 2030 무안군기본계획, 무안군
국토교통부(2020),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훈령 제1344,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2012),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2019), 제5차 국토종합계획,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2021), 새만금 기본계획(변경), 새만금개발청
한국산업단지공단(2020), 전국산업단지 현황지도, 한국산업단지공단
법제처(<http://www.moleg.go.kr>)
토지이음(<http://www.eum.go.kr>)

정책연구 2021-27

새만금권 광역도시계획의 필요성과 수립방향 연구

발 행 인 | 권 혁 남

발 행 일 | 2021년 11월 30일

발 행 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357-5 95530 (PDF)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2021년도 주요 연구과제

기본연구

『무성서원원지』 해(1884년) 해제 및 번역
현대사회에서의 문화의 사회적 기능과 사례 연구
전북 모빌리티 리포트 (Mobility Report) 기본방향 구상
전라북도 뿌리산업 실태와 경쟁력 결정요인 분석
농촌마을 기초생활서비스 격차분석 및 해소방안
전라북도 공공갈등 관리 방안 연구
전북 농촌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식품콜드체인물류시스템 표준화 방안 연구
전라북도 일·생활균형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기획연구

전라북도 여성·가족 미래비전 전략 수립 (Ⅱ)
국제기구 유치에 위한 FAO 세계농업대학 설립 중장기 방안 연구
전라북도 중장기 경제정책 수립 방안 연구(Ⅱ)

정책연구

강 생태관광 체험기반 조성 기본계획 수립
디지털 뉴딜 성공추진을 위한 전북 공간정보 발전 전략
전라북도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운영방안 연구
전북도립미술관 조직의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
지역사회 생활기술통합학교 지정 및 운영방안
전북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활성화 방안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세계잡버리 연계 정부지원사업 발굴 연구
전라북도 저출산 정책수요 및 대응방안 연구
전북 ICT산업 기반경쟁력 강화 방안
동진강 하천수질개선을 위한 농업배수 관리방안
전라북도 식품기업 기술혁신 방안
새만금지역 통합관리를 위한 전라북도 출장소 설치방안 연구
새만금권 광역도시계획의 필요성과 수립방향 연구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립에 따른 전라북도 인프라 장기구상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 자원체계 구축방안
전라북도 장학숙 중장기 운영 발전방안 연구
전라북도 중소형/특수목적선 조선산업 고도화 방안 연구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진단과 개선방향 연구
아태마스터스대회협회 유치방안 연구
청년창업농 영농실태와 정착지원 개선방안 연구
전라북도 비대면 문화예술 활성화방안
지역활성화 거점시설의 지속가능한 통합관리 및 운영방안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지원조직 활용방안 연구
전라북도 드론산업 여건과 육성 방안
전라북도 웰니스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